성과관리 전략계획

(2017~2021)

2017. 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17. 8.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0-5126, 6175)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55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3
2. 해양수산정책 환경 ····· 7
3. 향후 정책추진 방향 ····· 9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1

1. 해양수산부 일반현황 ····· 13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 16

Ⅲ. 세부 추진계획 ····· 19

전략목표 Ⅰ.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항만을 지역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 21

Ⅰ-1 세계 5위 수준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한다. ····· 23
Ⅰ-2 항만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항만·물류시장으로 진출한다. ····· 27
Ⅰ-3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 경쟁력 확보로 항만물동량을 확대한다. ····· 31
Ⅰ-4 항만지역에 신산업을 집적시키고 항만재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항만도시를 건설한다. ····· 35

전략목표 Ⅱ. 고부가가치 수산업을 실현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한다. ····· 39

Ⅱ-1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양식생산량을 확대한다. ····· 41
Ⅱ-2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 ····· 44

Ⅱ-3 수산식품가공 산업과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한다. ····· 47
Ⅱ-4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로 귀어귀촌을 확대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킨다. ·· 50

전략목표 Ⅲ.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한다. ····· 55

Ⅲ-1 국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한다. ····· 57
Ⅲ-2 해양수질·생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이용을 실현한다. ···· 63

전략목표 Ⅳ.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활용한다. ····· 66

Ⅳ-1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확대한다. ····· 68
Ⅳ-2 극지·대양 진출 및 해양자원 산업화를 통해 해양자원을 확보·활용한다. ·· 71
Ⅳ-3 전략적 국제협력으로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한다. ····· 75

전략목표 Ⅴ. 해양수산 신산업을 본격 상용화하고,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한다. ····· 82

Ⅴ-1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하고 국민 레저 수요를 창출한다. ····· 84
Ⅴ-2 해양신산업 상용화를 통해 국내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 88
Ⅴ-3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94

전략목표 Ⅵ. 대형사고 제로화로 안전한 바다를 실현한다. ····· 98

Ⅵ-1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를 위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세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 100
Ⅵ-2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양재해를 막는다. ····· 104
Ⅵ-3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제 해사안전분야 영향력을 확대한다 ·· 110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가. 해양 분야

◇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15.5)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해양관광·신산업** 육성, **극지·대양** 진출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14~'23년)을 바탕으로 **크루즈·마리나** 육성, **「해수욕장법*」** 제정('14.6) 등 해양관광 발전의 전기 마련

* 해수욕장 이용객 : '12년 7,500만명 → '16년 1억명 돌파(1억 300만명)

○ **제주 시험파력발전소**를 **준공**('16.7)하여 **해양에너지**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해양바이오** 최초 벤처 창업('16.9) 등 신산업 성과 가시화

○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진출('13.5),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준공('14.2),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취항**('16.11)으로 극지·대양 개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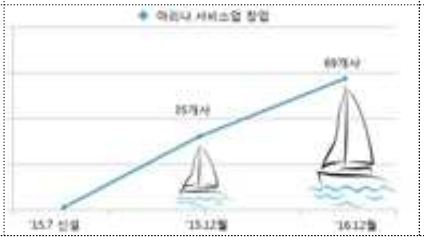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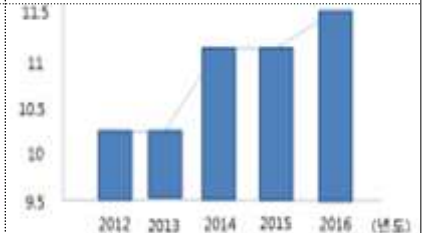
* 남극에 2개 이상 상설기지(장보고·세종)를 보유한 10번째 국가로 진입

○ **제3차 독도 기본계획** 수립(''16~'20)과 독도주변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해 **독도 주권**을 **강화**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6개소, 6개)

○ **인도양 해저열수광상**('14.6),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 **확보***('16.7), 망간단괴 채광시스템 실증 성공('15.12, 동해) 등 심해저 자원 개발 가속화

* 공해상 3개 광종의 광구를 모두 보유한 3번째 국가(중국, 러시아)로 진입

< **해수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 ('12년→'16년) >

< 크루즈 관광객·경제효과 >	< 마리나서비스업 >	< 심해저광물 독점광구 >
		
28→195만명, 1,700억원→2조원	0→69개 (마리나서비스업 신설)	3→5개소, 10.2→11.5만㎢

나. 수산 · 어촌 분야

◇ **수산물 수출** 증대와 **양식업 발전**을 통해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 어촌·어항 개발로 **살기좋은 어촌** 실현의 기반 마련

○ **김·굴** 등 新수출유망상품 개발,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13~'16, 9개소), 신선 물류망 구축으로 **수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

○ **조건불리 직불제** 도입('14)과 **수협** 구조개편('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16)으로 수산업의 중장기 발전기반 마련

○ **바다숲·바다목장*** 조성과 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14~) 등 사라진 어종 복원

* 바다숲 : '12년 1,946→'16년 12,208ha, 바다목장 : 10→26개소 / 지정감척 30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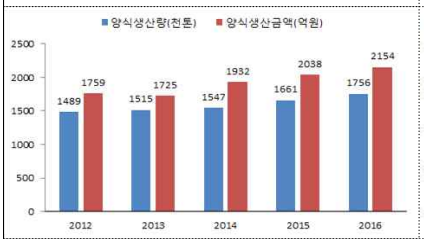
○ 참다랑어·연어('15), 뱀장어·명태('16) 등 **신규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플락(16개소) 등 **친환경 양식 기술** 개발·보급

○ **HACCP 적용 양식장 확대**('12년 19→'16년 113개소)와 전국 8개권역 방역센터 구축, 원산지·이력제 관리 강화로 **수산식품 안전성 제고**

○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100만명** 돌파('15)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가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어항의 특화 개발* 추진

* 다기능('16~'21) : 낚시관광형(3), 피셔리나형(2), 복합형(5) / 아름다운 어항('17년 착공) : 4개소

< 해수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 ('12년→'16년) >

< 양식 생산량·금액 >	< 어가소득 >	< 수산물 수출 >
		
149→176만톤, 1.76→2.15조원	3,738→4,390만원(도시 69→76%)	'15년 19.2→'16년 21.3억불

다. 해운 · 항만 분야

◇ **해운 선사**의 **경영 지원**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 항만개발 **규제 완화**로 항만 기능 다변화

○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13), 해양금융종합센터 및 **한국해양보증보험** 설립('14),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 마련('15) 등 해운선사 지원

○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으로 **전체 항만물동량**은 연평균 약 **4%**(1.3→1.5억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4%이상 증가**(2,225→2,596만TEU)

* 인천신항 개장('15.6), 동해항 3단계 착공('16.6), 새만금 신항 방파제 완공('16.11) 등

○ **부산·광양항**('15)·**인천항**('16) 등 항만별 **특화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산업간 집적과 융·복합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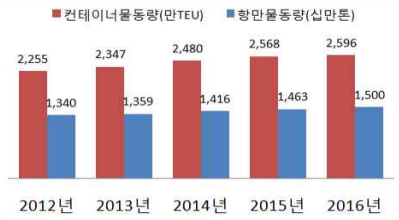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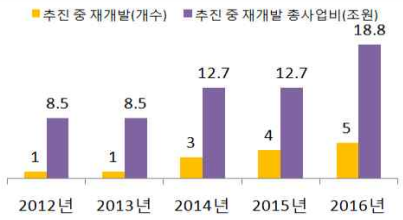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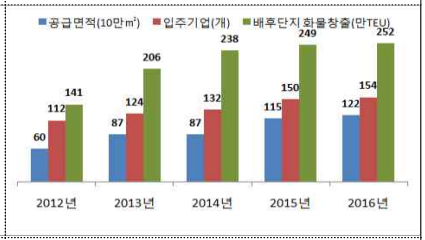
* 부산항 : 세계 2대 환적항 / 광양항 : 항만산업클러스터 / 인천항 : 도시와 상생하는 물류·해양관광 거점

○ **항만 배후단지** 공급과 화물창출이 **약 2배 증가**(600→1220만㎡, 141→252만TEU)하고, **민간개발** 방식 **도입**('15) 등 규제 완화

○ 4년간 총 **10조원 규모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후포마리나 착공, 4개 마리나 협약 체결 등 **6개 거점마리나 개발 본격화**

* 고현항·동해묵호항(착공), 영종도·묘도(계획수립), 인천내항 1·8부두(공공개발 전환) 등

< **해수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 ('12년→'16년) >

< 국가 항만물동량 >	< 항만재개발 >	< 항만배후단지 공급 >
		
1.3→1.5억톤, 2,255→2,596만TEU	1→5개소, 8.5→18.8조원	603→1,219만㎡, 112→154개

라. 해양환경·안전 분야

◇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16)를 통해 해양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연안여객선 등 **혁신적인 안전대책**으로 해양사고 저감

○ **시화호·부산연안**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13·'15)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12년 18개소 360㎢→'16년 26개소 577㎢)

○ **연안침식관리구역** 도입('14, 현재까지 6개소)과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확대**('12년 172→'16년 250개소)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지속 추진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확대**(52→77종)하고,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 지정***과 **갯벌 복원 사업****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 강화

* 물개(동해), 점박이물범(서해), 바다거북(남해), 남방큰돌고래(제주) / ** '13~'16년 9.7㎢

○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선제적 개발로 **세계 시장**의 **46%**를 **점유***, 향후 직간접적으로 1,200조원 시장이 예상되는 **e-Nav**** **사업**을 **선도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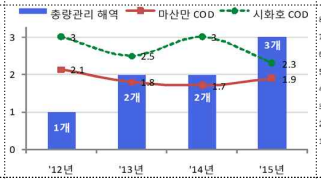
* '13~'16년 전 세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수주액 27조원 중 우리나라 기업이 1.3조원 차지

**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 **선박 현대화** 등을 통해 연안여객 **인명사고**(사망·실종) **제로** 달성('15~)

* 선령 제한(30→25년), 승객·화물 전산발권, 해사안전감독관 도입,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등

< 해수부출범 이후 주요 성과 ('12년→'16년) >

<육상폐기물 투기량>	<연안오염총량관리>	<갯벌복원 및 가치>	<해양사고 인명피해>
			
2,282천㎥→0 (전면금지)	1→3개소, COD(3.0→2.3)	1.7→11.4㎢, 104→717억원	122('12)→467('14)→106명('16)

2. 해양수산 정책환경

□ (해양) **해양관광, 깨끗한 해양환경,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자원·에너지원** 활용 기대 상승 전망

○ (**해양관광**) 국민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해양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섬·갯벌체험 등 **해양생태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 (**해양생태계**) 물개, 점박이물범,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 증가**, 보름달물해파리 등 **유해 생물**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 (**해양영토**) 동해 표기, 독도관련 일본의 행위,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 등을 계기로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예상

□ (수산) **어업 생산**은 양식생산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고,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물 자급률**은 **소폭 상승** 전망

○ (**생산**) **연근해·원양어업 생산**은 **정체***되나 **양식생산**은 기술혁신 등으로 **지속 증가**** 전망, **전체 생산량**은 **소폭 증가** 예상

* 연근해(만톤) : ('13)103→('15)106→('17e)106
** 양식생산(만톤) : ('10)135→('15)166→('17e)185

○ (**수출**)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수출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 대비 필요**

○ (**소비·자급률**)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는 '15년 대비 **6.8%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산물 자급률**은 **소폭 상승*** 예상

* 1인당 소비(kg) : ('13)51.3→('15) 58.8→('17e) 54.8
** 자급률(%) : ('13)76.8→('15)71.5→('17e)75.6

□ (해운) 글로벌 경기불황에 따른 **해운산업 위축**과 **'17년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라 **해운강국**으로서의 **위상 하락** 및 물류네트워크 저하

○ **건화물 시장***은 중국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운임약세** 지속, **컨테이너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시황 국면**이 **지속** 전망

* 물동량 : ('15) 45.5 → ('17) 48.2억톤 / 선복량 : ('15) 7.8 → ('17) 7.9억DWT

** 물동량 : ('15) 178.4 → ('17) 181.8백만TEU / 선복량 : ('15) 19.7 → ('17) 20.4백만TEU

○ 글로벌 원양 컨테이너선사들은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 확대**, '16년 중국·일본선사 합병에 이어 '17년 **해운동맹 재편 본격화*** 예상

* 4개 얼라이언스(2M, G6, CKYHE, O3) → 3개 재편(2M, Ocean, THE)

□ (항만)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에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총물동량 증가세 둔화** 예상('16 2.7%→ '17 2.6%)

○ **컨테이너 물동량**은 '16년 한진해운 물동량 이탈에 따른 **기저효과**로 **'17년 4%대 성장**이 예상되나 **상해항 추가 개장*** 등 리스크 잔존

* '17년중 상해 양산항 4단계 완공 예정(양산항 컨부두 17 → 24선석)

○ 기존 도심 확장으로 **도시와 항만간 조화**를 위한 **항만재개발** 및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관광 인프라 **수요**가 **지속 증가**

◇ **우리나라 해양수산산업 규모**

ㅇ (산출액) 155조원('1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3,564조원)의 4.4% 차지

- 전체 산업에서 해양수산업의 산출액 비중은 '08년 5.2%에서 '13년 4.2%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2014년 4.4%로 소폭 상승

ㅇ (부가가치) 총 86.9조원('14년 기준)으로 GDP(1,355조원)의 6.4% 차지

- 산출액과 유사하게 '08년 7.3%에서 '13년 6.2%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14년 6.4%로 소폭 상승

3. 향후 정책추진 방향

□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의 경제거점화

○ 해운항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모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혈관 역할로서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재도약 추진**

- 해운·항만 산업의 독자적인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나 수출기업·**해운·조선산업 상생**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

○ 아울러, 물류중심의 항만을 국가경제 성장과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민간투자 활성화 등 추진**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 **고부가가치 어종**에 대한 **첨단 양식기술** 개발 및 산업화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유통체계 구축 추진**

○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수산물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수산 식품산업화 및 **수산물의 수출·가공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 세계식량 생산 : 30억톤(곡물84%, 육류10, 수산물6), 1인당 수산물 연평균 소비증가율 : 2%

□ 수산자원 회복 및 해양환경 보전

○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 급감에 대응하여 휴어제 등 본격적인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 **국내 어업자원 회복 추진**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마련 추진**

- 아울러, **해양생태**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 산업**(갯벌 생태체험) 등을 통해 보전과 활용을 **균형있게 접근**

□ **해양 영토 수호와 해양자원 확보 추진**

○ 우리나라 영해 및 EEZ의 수호 역량을 강화하고 극지 연구, 북극 항로 개척 등을 통해 **대양 진출 확대**

○ 아울러, 해저광물자원,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산 네트워크 확충으로 **해양수산자원 확보 추진**

□ **해양수산 신산업 및 창업 활성화**

○ 국민의 해양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해양관광·레저 산업 집중 육성**

- 특히 최근 성장중인 크루즈·마리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신해양관광산업 발굴도 병행

* 해수, 해양기후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해양플랜트, e-Nav 등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기술을 개발 중인 산업의 **선제적 투자·기술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또한, 해양수산 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양질의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

□ **해양 사고·재난 예방 중점 추진**

○ 최근 발생한 연이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낚시어선, 화물선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양기상변화, 지진·해일 등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종사자,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추진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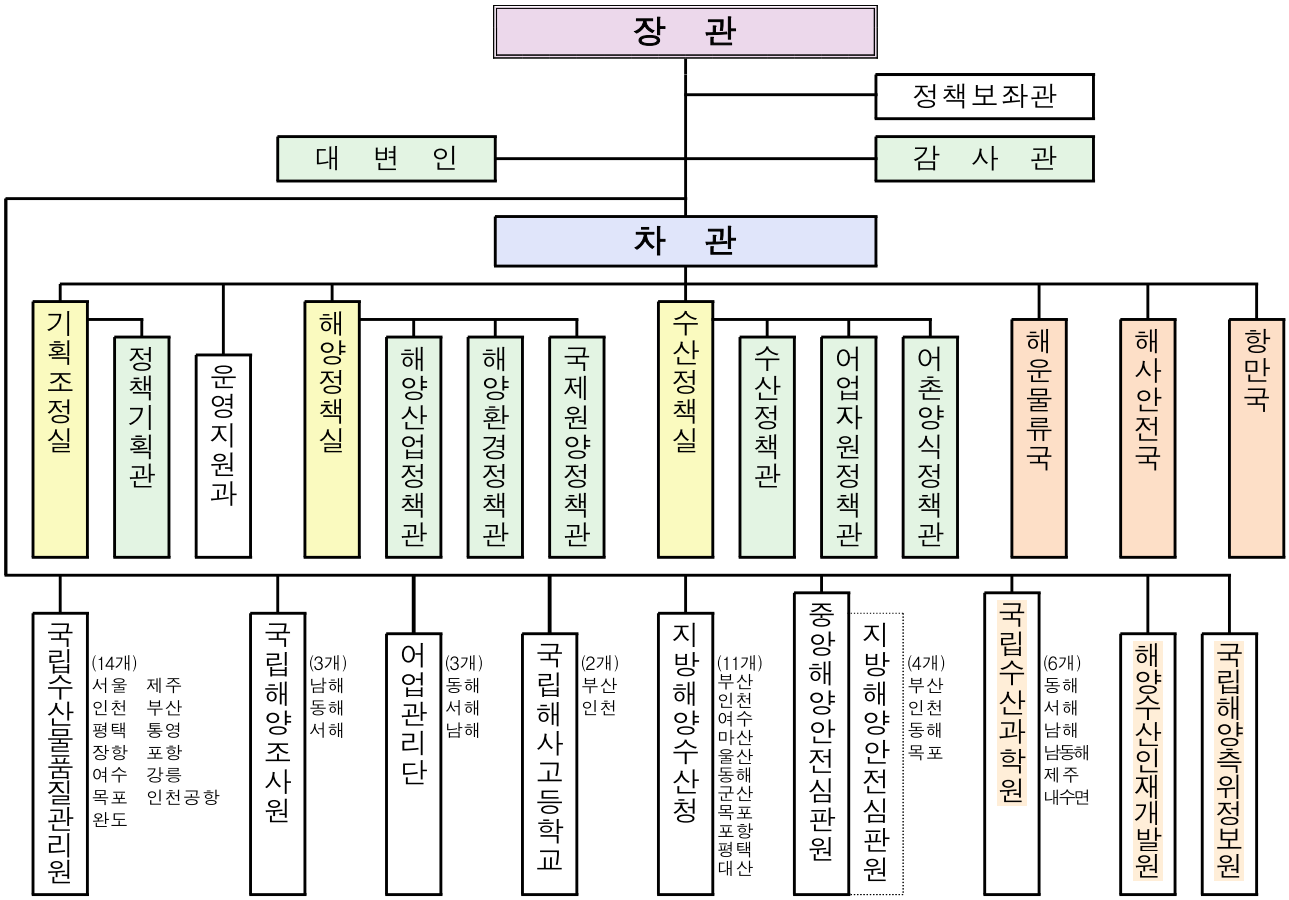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일반현황

(1) 조직

◈ **본부 : 1차관 3실 3국 9관**(44과 3팀)

◈ **소속기관 : 69개**(1차 22개, 2차 39개, 3차 8개) * 책임운영기관 : 3개



(2) 정원

(단위 : 명, 기준정원)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9급	연구직		교원직	시간선택
										연구관	연구사		
합 계	3,652	2	2	39	16	78	71	389	2,632	98	206	111	8.0
본 부	537	2	2	15	12	33	50	178	239	2	4	-	0.0
소속기관	2,484	-	-	17	3	39	20	189	2,066	6	27	111	6.0
책임운영기관	631	-	-	7	1	6	1	22	327	90	175	-	2.0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7	'18	'19	'20	'21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49,764	47,022	48,462	45,636	43,462
(전년대비증가율, %)	(2.0)	(△5.5)	(3.1)	(△5.8)	(△4.8)
○ 총계	64,551	59,746	64,085	59,394	54,310
(전년대비증가율, %)	(△1.6)	(△7.4)	(7.3)	(△7.3)	(△8.6)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2,941	3,147	3,367	3,602	3,854
(전년대비증가율, %)	(5.8)	(7.0)	(7.0)	(7.0)	(7.0)
○ 기본경비	393	405	417	430	443
(전년대비증가율, %)	(3.7)	(3.1)	(3.0)	(3.1)	(3.0)
○ 주요사업비	46,430	43,471	44,678	41,603	39,166
(전년대비증가율, %)	(1.8)	(△6.4)	(2.8)	(△6.9)	(△5.9)
□ 예산					
○ (총)지출	43,878	41,619	42,670	39,846	37,673
(전년대비증가율, %)	(3.3)	(△5.1)	(2.5)	(△6.6)	(△5.5)
○ 총계	56,873	52,021	55,360	50,372	45,309
(전년대비증가율, %)	(△0.1)	(△8.5)	(6.4)	(△9.0)	(△10.1)
【일반회계】					
○ (총)지출	15,620	15,042	15,006	14,598	15,031
(전년대비증가율, %)	(9.0)	(△3.7)	(△0.2)	(△2.7)	(3.0)
○ 총계	27,218	24,046	26,299	23,728	21,271
(전년대비증가율, %)	(1.0)	(△11.7)	(9.4)	(△9.8)	(△10.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지출	8,689	8,776	8,742	8,365	8,537
(전년대비증가율, %)	(5.0)	(1.0)	(△0.4)	(△4.3)	(2.1)

구 분	'17	'18	'19	'20	'21
○ 총계	10,086	10,173	10,139	9,762	9,934
(전년대비증가율, %)	(2.6)	(0.9)	(△0.3)	(△3.7)	(1.8)
【교통시설특별회계】					
○ (총)지출	14,867	13,449	15,012	12,961	10,185
(전년대비증가율, %)	(△0.2)	(△9.5)	(11.6)	(△13.7)	(△21.4)
○ 총계	14,867	13,449	15,012	12,961	10,185
(전년대비증가율, %)	(△0.2)	(△9.5)	(11.6)	(△13.7)	(△2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총)지출	436	427	421	418	416
(전년대비증가율, %)	(△3.5)	(△2.1)	(△1.4)	(△0.7)	(△0.5)
○ 총계	436	427	421	418	416
(전년대비증가율, %)	(△3.5)	(△2.1)	(△1.4)	(△0.7)	(△0.5)
【지역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4,265	3,926	3,488	3,503	3,503
(전년대비증가율, %)	(△1.3)	(△7.9)	(△11.2)	(0.4)	(0.0)
○ 총계	4,265	3,926	3,488	3,503	3,503
(전년대비증가율, %)	(△1.3)	(△7.9)	(△11.2)	(0.4)	(0.0)
□ 기금					
○ (총)지출	5,886	5,403	5,792	5,790	5,789
(전년대비증가율, %)	(△6.8)	(△8.2)	(7.2)	(△0.0)	(△0.0)
○ 총계	7,677	7,726	8,725	9,022	9,001
(전년대비증가율, %)	(△11.1)	(0.6)	(12.9)	(3.4)	(△0.2)
【수산발전기금】					
○ (총)지출	5,886	5,403	5,792	5,790	5,789
(전년대비증가율, %)	(△6.8)	(△8.2)	(7.2)	(△0.0)	(△0.0)
○ 총계	7,677	7,726	8,725	9,022	9,001
(전년대비증가율, %)	(△11.1)	(0.6)	(12.9)	(3.4)	(△0.2)

* '17～'21 중기사업계획 기준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

□ 해양수산부의 임무에 따라 국정과제 및 정부기조 등을 반영한 비전을 마련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6대 전략목표 마련**

○ **100대 국정과제**에 **단독과제**로 포함된 해운산업 재건, 해양영토 수호 및 해양안전확보, 해양환경·수산자원 회복을 **전략과제**로 선정

- 특히, 해운산업 침체, 독도·이어도 등 해양영토분쟁, 세월호 등 해양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점적·종합적 추진 필요**

○ 아울러, **정부**의 **주요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양신산업 육성과 맞춤형 인재 양성을 **전략 목표로 설정**

- 지속적 투자·지원을 통해 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e-Nav 등 해양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아울러,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지원체계 강화와 복지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전문인력 공급·지원 추진**

□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목표**를 **성과목표 설정**

○ **국정과제**에 포함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

○ 아울러, 해양수산신산업 창출 및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은 산업화 수준 및 시장 및 기술 성격 등에 따라 **성과목표 구분 설정**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개발·관리·보전**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참고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비전)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바다를 국민의 행복공간으로 만든다.

○ 해운강국 재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수산자원 개발·보전,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영토 수호, 해양안전확보 등을 통해,

- **해양수산분야**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해양강국 실현**

<거꾸로 보는 세계 지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

□ 임무·비전 및 전략·성과목표 체계도

임무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개발·관리·보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비전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전략 목표		성과 목표
Ⅰ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1. 세계 5위 수준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한다. 2. 항만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항만·물류시장으로 진출한다. 3.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 경쟁력 확보로 항만 물동량을 확대한다. 4. 항만지역에 신산업을 집적시키고 항만재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항만도시를 건설한다.
Ⅱ	고부가가치 수산업을 실현하고 살기좋은 어촌을 조성한다.	1.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양식생산량을 확대한다. 2.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 3. 수산식품가공 산업과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한다. 4.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로 귀어귀촌을 확대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킨다.
Ⅲ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한다.	1. 국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한다. 2. 해양수질·생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이용을 실현한다.
Ⅳ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해양수산자원을 확보한다.	1.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확대한다. 2. 극지·대양 진출 및 해양자원 산업화를 통해 해양자원을 확보·활용한다. 3. 전략적 국제협력으로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한다.
Ⅴ	해양수산 신산업을 본격 상용화하고,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한다.	1.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하고 국민 레저 수요를 창출한다. 2. 해양신산업 상용화를 통해 국내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3.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
Ⅵ	대형사고 제로화로 안전한 바다를 실현한다.	1.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를 위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세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2.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양재해를 막는다. 3.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제 해사안전분야 영향력을 확대한다.

Ⅲ. 세부 추진계획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 본 방 향

주요목표 ('16→21)	· **해운산업 매출액** : 29조→45조원 · **항만 총물동량**: 15억톤→17억톤 · **항만지역 민간투자** 86백억원→ 99백억원 ·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지속 추진**

◇ **세계 5위 수준의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한다.**

○ 산업·경영·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리스크 관리로 해운산업 체질 개선

○ 해운·조선산업, 선·화주 연계 상생 패러다임 구축

○ 신성장동력 확보 및 안정화기반 마련으로 연안해운 내실화

◇ **항만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항만·물류시장으로 진출한다.**

○ 물류기업 해외거점 확보 지원 및 K-GTO를 통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 우리기업의 항만개발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강화 및 기반 조성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운영정상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 경쟁력 확보하여 항만 물동량 확대한다.**

○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부산항 위상 강화 등 국제물류거점으로서 항만경쟁력 강화

○ 국가기간산업 성장기반으로서의 항만의 물류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효율적 항만운영을 위한 항만기본서비스 내실화

◇ **항만지역에 신산업을 집적시키고 항만재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항만도시를 건설한다.**

○ 항만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新해양산업을 집적·육성하여 지역성장 거점화

○ 화물창출형 항만조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 전략목표 Ⅰ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20	'21
Ⅰ-1. 세계 5위 수준의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한다. [해운산업 매출액(조원)]	29	31	34	37	40	45
Ⅰ-2. 항만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항만·물류시장으로 진출한다. [해외항만시장 진출 지원·개발협력 (누적건수)] [항만민간투자사업 유치규모(억원)]	72 8,629	93 8,871	110 9,119	126 9,374	142 9,637	157 9,907
Ⅰ-3.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 경쟁력 확보하여 항만 물동량 확대한다. [항만 총물동량(억톤)]	15.0	15.5	16.0	16.4	16.9	17.1
Ⅰ-4. 항만지역에 신산업을 집적시키고 항만재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항만도시를 건설한다. [항만재개발 추진 면적(만㎡)](누계)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 추진율(%)](누계)	240 42	552 54	883 66	883 78	950 90	1,268 100

성과목표 Ⅰ-1 세계 5위 수준의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한다.

(1) 주요 내용

□ **해운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산업기반·기업경영·투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설립 등을 통해 **산업·경영·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해운산업에 특화된 금융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해운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

○ 운임지수 개발 및 시황정보 제공 등 해운거래 주요기능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상생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운 재건**

○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조 수주물량 확대 등를 통한 **조선산업 활성화**를 연계한 **상생 패러다임 구축**

○ 선사와 화주간 상생을 유도하여 **장기운송계약 연장·확대, 최저가 낙찰제 보완** 등을 통한 화물의 안정적 화물확보 기반 마련

□ **내항 해운의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연안해운 사업에 대한 **수혜집단**의 **환류**를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사업** 등을 통한 내항해운 新 **성장 동력 확보**

○ 연안화물분야 **경영수지 분석** 등 **통계조사**를 통해 선·화주 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유도 및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기반** 마련

○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제도 확대** 및 연안여객선 이용자 **고객 만족도** 평가 **시행** 등으로 대국민 **고객 서비스 질 향상**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추진**

○ 선박금융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기반·기업경영·투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18)

* 공사 설립 및 재원 마련 근거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추진('17.하반기)

○ 국적선사간 협력체로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17.8)하여 중복 항로 구조조정 및 신항로 공동 개척 유도

○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 제도 활성화 추진('17,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 **실효성 있는 상생프로그램 구축·운영**

○ 저효율 노후 외항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17.下) 및 노후 선박에 대해 대체 건조시 지원 착수('18~)

○ **해운-조선 상생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선박 수주·발주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 상생방안을 위한 공동연구 등 협력체계 견고화

○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통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연구**('17.下) 추진 등 상생프로그램 지속 개발

* 무역협회, 선주협회, 5개 대기업 물류자회사 및 발전사 등 참여('16.12~)

- 전략 물자 운송 등에 있어 국적선사와 **장기계약 연장** 및 기존 외국 선사와 계약건에 대해서는 신규계약 유도

□ **침체된 내항해운 시장의 내실화를 통해 성장기반 확보·추진**

○ 민간의 친환경 선박 도입 확대를 위해 **이차보전사업 · 현대화 펀드** 사업 **지원시 인센티브 확대**('17.上) 및 **LNG 국고여객선** 건조 **방안 수립**('17.下)

○ 내항화물운송사업 **경영실태 분석** 및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7.9) 및 **종합관리 DB 구축**('17.12)

○ 계절별 맞춤형 **섬 여행 할인이용권 상품 개발**('17.5, '17.12) 및 연안여객선 이용 **고객만족도 평가 용역** 추진('17.4~12)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 관련 관계기관 간 이견 존재**

○ 기존 해운금융 사업 이관과 정부 신규출자 등이 필요하나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은 부정적 입장**

□ **해운, 조선, 화주 등 이해관계에 따라 상생성과 변동 가능성 높음**

○ 조선소의 신용등급에 따른 **RG발급 여부 등 금융조달여력** 등에 따라 선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생프로그램 작동이 곤란**할 가능성

○ 국적선사에 대한 적취율 향상 등의 문제는 화주 등 **수출입업체의 경영전략, 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

□ **도서민 생필품 운송지원 관련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사업 차질 우려**

○ **한정된 예산**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형평성, 지역 이기주의**로 **사업 추진 차질 우려**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해운시장 현황 및 동향

○ **(글로벌 시장)** '08년 이후 **선박 공급**이 **수요 증가세**를 상회하는 **공급과잉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 선사**들도 **대형화** 경향

- 리먼 사태('08) 이후 **세계 선복량**은 **'컨'** 약 **64%**, **벌크** 약 **94%** 증가, 동기간 해상 **물동량 증가율**(37%. 51%)보다 **1.7배, 1.8배** 각각 증가

- 글로벌 선사들간 **M&A 확대***, **얼라이언스** 재편**('17.4)으로 원양 컨테이너 시장에서는 **대형 선사들**간 **시장지배력 확보 경쟁** 심화 양상

* '14년 기준 20대 '컨' 선사 추이 : '14.末 20개 → '17.末 15개(중국 양사 합병 등 M&A 4건, 한진해운 파산 등) → '18.末 13개(일본 3사 합병) → '20.末 10개 예상

** 얼라이언스 재편 : 기존 4개(2M, CKYHE, G6, O3 → 3개(2M+현대, THE, Ocean)

○ **(국내 시장) 컨테이너 시장**은 한진사태 이후 **국적 선사의 선복량 감소, 공급과잉** 및 **시황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어려움 지속

* '컨' 운임지수(p) : ('15.上) 975 → ('15.下) 783 → ('16.上) 696 → ('16.下) 718 → ('17.上) 786

- **(원양 '컨' 시장)** SM상선의 한진해운 영업망 인수('17.1)에도 불구하고, **국적 선사**의 **수송능력**은 **한진 사태 이전대비 48% 수준**

* 원양 선복량(TEU) : ('16.8) 105만(현대 43만, 한진 62만) → ('17.5) 47만(현대 43만, SM 4만)

- **(연근해 '컨' 시장) 대형선박**의 **연근해** 시장 **유입 확대**, **화주들**의 **국적선사 이용 기피**, 정책 금융의 낮은 우선순위 등으로 어려움 가중

성과목표 Ⅰ-2 항만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항만·물류시장으로 진출한다.

(1) 주요 내용

□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 물류기업의 **초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국제물류 투자분석센터를 통한 **해외 물류시장 현황분석, 투자정보 제공**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을 통해 **진출유망국 내륙물류 시장, 투자정보** 등에 대한 분기별 연구 진행 및 리포트 발간

○ **K-GTO**(Global Terminal Operator)를 통해 **국내외 주요항만**의 **'컨' 터미널** 등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 한국해운연합(선사), 하역사,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고, 글로벌해양펀드, (가칭) 글로벌 해양진흥공사 등이 금융·정책 지원

□ 해외항만개발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 추진

○ 우리기업의 국제 항만개발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코자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실시

* 최빈국 대상 인도적 차원의 **ODA형 사업**과 우리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개도국 **마스터플랜**(M/P), **타당성조사**(F/S) 수립 지원

○ 우리기업 진출 종합지원을 위한 **개발·협력분야 전문 인력** 확보, **民·官·學 지원체계** 마련, 진출기업 **금융경쟁력 강화** 추진 중

□ **항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항만배후단지** 조기확충 및 임대방식의 **항만배후단지 활용**의 **한계*** **해소**를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15.12.)

* 임대배후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지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 곤란

** 민간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분양

○ **운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부두에 대해 여건을 고려한 **사업재구조화** 등 **운영정상화를 지원**하고,

- 민자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해외 항만 투자여건 분석** 및 **국내 주요항만 지분인수**

○ **국적선사 기항지**, 항만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여건**을 **분석**하고, **아시아권 항만 터미널 확보** 등 성공사례 창출('19.下)

○ 국적 물류기업이 운영중인 **부산 신항 3부두** 지원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및 **글로벌 해양펀드 지분출자** 추진('17.上)

□ **해외진출 재정 지원사업 및 해외 물류 투자정보 제공**

○ 국적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초기 리스크 완화를 위해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조사비용**을 지원('17년~, 계속)

○ 국내 해운업계의 국제물류시장 변화에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신흥투자국가 물류시장분석**, **물류동향 주간지** 등 **발간**('17년~, 계속)

□ **해외 항만개발협력사업 맞춤형 지원** 및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인도적 차원의 **ODA형 사업**과 우리기업 수주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창출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연중)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항만특화펀드 조성 추진**('18~) 및 **해외사업 정보서비스* 고도화**('19.上~) 등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항만개발 정보망(coscop.or.kr)을 통해 진출 관심기업에게 동향, 입찰정보 제공

□ **항만민간사업(배후단지, 민자부두 정상화 및 신규사업)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부산, 인천 등 **신규 민간개발 사업**** **발굴**('17년~, 계속)

* 평택(1종, 113만㎡, '17.4 사업자 지정), 인천남항(2종, 33만㎡, '17.7～ 협상추진)
** 부산신항 웅동 2단계(1·2종) 및 인천신항(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 항만 민자부두 **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운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지속추진**, 부산신항 **대형수리조선 신규사업** 추진('17년~, 계속)

* (재구조화) 마산(완료), 포항, 인천 (자금재조달) 군산, 부산2-4, 목포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국제 항만시장**은 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항만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형***으로 주로 추진

* 건설사·금융사·선사·물류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발굴 및 지분투자 추진

○ 다만, 국내 기업들의 **직접투자 기피** 및 **단순도급형 수주 선호** 경향으로 ’16년 수주액($2.0억)은 ’04년 이후 역대 최저치 기록

□ **국제 물류시장**은 유가, 환율 변동 등 **외부 변수의 발생**으로 **물류업계 전반의 해외진출 기피 경향 발생 가능**

□ 해외의 **선도 GTO**는 정책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항만 터미널**을 **선점**하고 있어 **K-GTO 육성**의 **약점**으로 작용

□ 민자사업 **운영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복잡한 재무구조 및 여건 등으로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Ⅰ-3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 경쟁력 확보로 항만 물동량을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입지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항만을 세계 화물이 모이는 **동북아 관문으로 육성**

○ **부산항** 등에 대한 **물류인프라 확충**으로 화물의 하역·보관·운송 및 배후 관련활동을 통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 **3대 컨테이너 항만별 맞춤형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항만 생산성 강화를 위한 **해운항만물류 R&D** 추진

□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이 위치한 주요 산업항만 육성**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 기반 마련**

○ 원자재 수입, 제품수출 **인프라 확충, 산업용지 공급** 등을 통해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운영체계 구조개편**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 **산업고도화**에 따른 물동량 정체, **환경 및 보안·안전문제** 및 **인력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 필요**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국제물류거점으로서의 항만경쟁력 강화**

○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부산항의 위상 유지**를 위해 **환적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다양화 추진**

- 신항 혼잡해소, 북항기능 이전을 위해 **연도 터미널**(13선석)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항로확장, 토도제거 등 **지원인프라 조기 확충**

- **부산**북항 통합법인에 대한 **BPA 지분출자를 지원**하고, **대형 수리조선단지, LNG벙커링 터미널** 등 **새로운 서비스 시설**확충

○ 국내 최대 항만산업클러스터인 **광양항의 산업·물류인프라 확충**

- **자동차 환적부두** 추가확보, **24열 크레인 운영**, **낙포부두 리뉴얼**, 특정항로 준설, 여수신북항 등 **물류인프라 확충**

○ **대중국 수도권 물류거점**으로서 **인천항 경쟁력 강화**

- '컨'터미널 전체 개장, 항로 증심, 1단계 배후단지 및 신규 투기장 조성 등을 통해 **인천신항 조기활성화 추진**

○ 항만 생산성 강화를 위해 **'해운항만물류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17.10)하고, **Y/T 연료원**을 **LNG**로 **전환**('17년 35대)

□ **국가기간산업 성장기반으로서의 항만인프라 확충**

○ **세계 4대 액체항만인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오일허브 1단계 적기 운영** 및 2단계 기반인프라 구축

○ 자동차·잡화 부두 추가 공급, 국제여객터미널 신규 개발 등 **수도권 새로운 산업거점**으로서의 **평택당진항 개발**

○ 새만금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새만금 신항을 차질없이 개발**하고, 강원권의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동해항 3단계 개발**

○ 군산항, 포항항, 목포항, 대산항 등 **주요 거점항 인프라 확충**

□ **효율적 항만운영을 위한 항만기본서비스 내실화**

○ 항만 물동량 정체, 취급화물 변동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토록 **운영 체계개편방안 마련**

○ **TOC 계약갱신요건**에 투자계획, 운영내실화 노력 등 반영

○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한 희망퇴직**(생계안정지원금 지급) 등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추진

*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확실한 물자 수송체계 확보를 위해 선박을 국가에서 건조·보유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관련된 물동량 변동 가능성**

○ **항만물동량**은 **항만자체** 및 항만에 기반한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여건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에 크게 의존**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산항 컨물동량이 '09년 11% 감소, '10년에는 18% 증가

○ 현재 생산·무역 회복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증가, 장기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외부요인으로 감소 가능성도** 있는 상황

□ 부산항 북항 통합법인에 대한 **부산항만공사 지분 출자**의 경우,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어려움** 예상

□ **항만인프라 확충 추진과 관련된 갈등 발생**

○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추진 중인 항만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공해발생, 연안침식**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의 갈등** 발생 가능

○ **사전협의 및 설득, 영향 최소화** 등을 통해 갈등 발생 방지 필요

□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및 세재 지원 방안 협의 필요**

○ 안보선대 건조를 위한 막대한 예산 지출과 세제 혜택에 대해 **재정당국의 반대 논리 극복 필요**

○ 필수선대 및 항만운영협약제도 수혜 기업의 선정에 있어 **특혜 논란,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 등 어려움 예상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해외동향)** 우리의 주경쟁 대상인 **상해 양산항 4단계**(7선석)가 '17년 완공*, 시운영 예정이며, **일본도 국제전략컨항만정책**** 지속 추진 중

* 양산항 시설 : 17선석(5.2km), 능력 960만TEU → 24선석(7.5km), 능력 1,590만TEU

** '15년 한신항 통합(오사카+고베) 및 '16년 게이힌항 일부 통합(요코하마+가와사키)

○ 싱가포르도 환적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항만*(TUAS) 개발 본격화

* 1단계 24.2억S$, 20선석(8.6km), 2천만TEU, '20년 완공 / '45년까지 총 6,500만TEU 개발

성과목표 Ⅰ-4 항만지역에 신산업을 집적시키고 항만재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항만도시를 건설한다.

(1) 주요 내용

□ **항만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노후·유휴화된 항만과 주변지역에 항만재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항만 건설로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新해양산업**을 **집적·육성**하여 **지역 성장 거점**으로 활용

○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구비된 유휴항만시설을 기업 생산활동에 제공 및 임대료 감면 등으로 기업 집적화

○ 기반시설 및 R&D지원, 해외시장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형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해양산업의 역량 강화

□ **화물창출형 항만조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 항만배후단지 개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민간개발·분양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항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 (**부산북항**) 상부 건축물 본격 조성* 등을 통해 **부산북항 도심**을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북항 전체**의 통합 기본구상안 마련**

* 오페라하우스, 부산항환승센터, 레지던스 호텔 등

** 북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확대 등 통합된 북항지역 종합 기본구상(안) 및 추진체계 마련

○ (**인천항**)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20착공 목표)을 통해 도심을 재생시키고, 영종도 매립지는 **국제적 해양관광 레저단지로 개발**('18착공)

○ (**광양항**) **항만**매립지를 **에너지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묘도재개발**('17착공) 및 **항만 산업공간 조성**을 위한 **제3투기장 1단계 사업추진**

○ (**기타**) 시행중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포남항 등 **신규 항만재개발사업 적극 발굴**

* 고현항 복합도심지구 조성('21준공) 및 동해·묵호 1단계 해양관광거점 조성('17준공)

□ **부산항·광양항에 대한 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클러스터 조기 안정화 추진**

○ 대상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면적**,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항만시설 활용** 등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17.12)

○ 부산항, 광양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17.12)하고,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정절차 :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해수부장관) 및 개발계획(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수립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수부장관)

**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초인프라 및 사무시설,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

□ **2030년을 목표로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시행**

○ 전국 무역항을 대상으로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시행

- **(부산항)** 글로벌 복합 비즈니스형, **(광양항)** 산업클러스트 기능 강화형, **(인천항)** 국제물류지원 강화형으로 개발

- **(평택·당진항)** 제조기반 부가가치 창출형, **(울산, 포항, 목포, 마산항)** 각 항만별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 특화형으로 개발

○ 항만배후단지 적기 공급 및 민간역량 활용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항만법 개정**

- 종래의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개발·분양·임대방식 도입**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공장 등의 설치 전에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임의처분을 제재**하여 조성취지에 맞게 운영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부산북항-신항, 인천내항-신항(북항) 등 **항만내 기능 조정, 사업여건 변화, 준설토 매립*** 등에 따라 항**만내 노후·유휴 항만시설 증가**

* 현재 항만내 총 1,710만㎡(여의도 6배)의 부지가 매립완료 부지공사 미착공 상태

○ **노후·유휴 항만시설**을 해양관광, 교육 및 문화 등과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기업유치, 화물창출 및 고용 등의 항만의 외적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창출 기반은 아직 취약**

□ **해양신산업 집적 및 항만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된 갈등 발생**

○ 항만재개발, 해양클러스터, 배후단지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추진관련 이해관계자 **민원 제기 및 언론보도**

○ 계획 수립시 지자체, 항만공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갈등 발생 방지 필요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항만재개발)**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42호 : 13개항만 19개소 항만재개발 추진

□ **(해양산업클러스터)**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65호 : 부산·광양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8~2030)'

* 항만법 제41조에 의거 전국 31개 무역항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전략목표 Ⅱ	고부가가치 수산업을 실현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주요목표 ('16→21)	· 양식 생산량: 184만톤 → 220만톤 · HACCP 등록률 : 11% → 26% · 수산물 수출액: 25억 → 36억불

◇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양식생산량을 확대한다.**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 친환경·첨단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종자·백신·배합사료 등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양식산업 고도화 추진

○ 고부가 품종의 R&D를 강화하고 전략적 육성 추진

◇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

○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 수산물 원산지 및 이력표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 **수산식품가공 산업과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한다.**

○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新수산식품 연구·개발 추진을 통한 수출형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

○ 수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 활성화 추진

◇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로 귀어귀촌을 확대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킨다.**

○ 어촌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도시민 등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행복어촌 공간 조성

< 전략목표 Ⅱ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20	'21
Ⅱ-1.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양식생산량을 확대한다. (양식 생산량: 만톤)	184	190	196	203	210	220
Ⅱ-2.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한다. (HACCP 등록률)	11	14	17	20	23	26
Ⅱ-3. 수산식품가공산업과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한다 (수산물수출액/억불)	21.3	25.0	27.0	29.0	32.0	36.0
Ⅱ-4. 살기좋은 어촌 만들기로 귀어귀촌을 확대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킨다. (귀어귀촌 창업자)	268	300	325	380	435	460

* 생산 계획(량)은 국정과제의 목표와 일치 / 연간 10만톤 씩 증대하여 '21년까지 230만톤 생산 목표

성과목표 II-1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양식생산량을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친환경·첨단 양식기술**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양식시설 구축** 등을 통해 **양식산업 생산성 혁신** 및 **고도화** 추진

○ 순환여과·바이오플락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갯벌양식 기술 개발** 등으로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

○ **IT·BT** 등을 **접목한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양식 시스템 등 **첨단 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양식업의 고도화** 추진

○ 참다랑어, 연어, 뱀장어와 같은 **고부가 품종의 R&D를 강화**하여,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 육성**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지속적인 양식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순환여과·바이오플락 등 **친환경·첨단 양식기술**을 적용한 **내수면 양식 시설을 구축**하고, 유통 시스템 등과도 연계

○ 사료를 주지 않는 **친환경 갯벌 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갯벌 양식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육상 종자생산 → 축제식 중간양성 → 갯벌양식으로 확산

** 다양한 패류 종자생산 기술, 품종별 적지개발 및 패류채취 자동화장비 등

○ 히트펌프·인버터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 및 **저탄소 친환경 양식산업 확대**

□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양식기술의 개발·보급**

○ **첨단 양식기술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새로운 양식 모델을 개발하고, 상용화된 **첨단기술**을 **민간에 확대 보급**

* ('18) 첨단양식 기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19~'20) 시범모델(안) 구축 → ('21~) 실증단지 조성 등

○ 참다랑어, 연어, 뱀장어 등 **고부가 품종의 R&D**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민간 진입을 유도하여 **대량생산 기반 확보** 추진

* 품종별 연구 클러스터 구축 계획 : 참다랑어('15~), 뱀장어('17~), 연어('18~) 등

□ **종자·사료·백신 등 양식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 BT 등의 기술과 접목하여, 미래 생명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18)

○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생산여건 조성을 위해, **배합사료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 추진

○ **폐사저감**을 통한 **생산성 확대** 및 **효과적인 질병 관리**를 위한 **백신 개발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국내·외 수산물 공급원으로서 양식업의 비중 및 중요성 증가**

○ 세계 양식 생산량(101백만톤)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196백만톤)의 약 51.6%('14)로, 양식업이 **미래 수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 국내에서도 환경 변화, 자원관리 강화 등으로 **어획량은 정체 상태**이나, **양식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 제고**

* 연근해 생산량(만톤) : ('08) 128 → ('16) 93 / 양식 생산량(만톤) : ('08) 138 → ('16) 184

** 수산물 생산비중('16) : 연근해 29%, 천해양식 57%, 원양 14%, 내수면 1

□ **소규모의 경영형태, 어장환경의 악화 및 양식면허의 폐쇄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저생산성에 직면해 있어, 생산혁신 필요**

○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어업생산 동향 등 통계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www.kosis.kr)

성과목표 II-2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

(1) 주요 내용

□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시설의 위생·물류 환경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확대

○ 천일염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소금산업 안전성 조사 및 이력제 활성화 등을 통해 천일염 안전성 제고

□ **국민들의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및 관심 증가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및 이력 표시 강화**

○ 원산지 표시 이행률 제고와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 및 중점 추진품목 확대 지정 등 추진

□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불법·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

○ 대중성 어종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검사 확대와 양식 유해물질 예방·관리를 위한 HACCP 등록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수산물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재개 추진 및 이와 연계한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조성 추진

- 경주에 건립중인 산지거점유통센터를 2017년에 조속히 준공하고,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연내 착공 추진

* 2021년까지 FPC 10개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개소 건립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수산물 위판장 및 직매장 등 유통시설 확충 및 물류·위생환경 지속 개선

○ 천일염 생산환경 위생관리를 위한 소금안전성 조사 확대* 및 천일염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통합(3종→1종) 추진('18)**

* 안전성 조사 염전수 확대(개소) : ('16) 84개소 → ('22) 104개소

** 3종(우수천일염,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친환경천일염) → 1종(우수천일염)

□ 안전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

○ 원산지 표시 이행률 제고를 위한 단속강화* 및 위반자 의무 교육 실시

* 원산지표시 단속업체 : ('17) 9.4만개소 → ('19) 10만개소 → ('21) 11만개소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관리 강화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계획 수립('19) 및 시범사업실시('20~)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 갈치·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70여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HACCP 등록 양식장 및 수산물 안전 검사 기관 확대

* 안전성 조사 강화 : ('16) 11% → ('22) 30% 이상

* HACCP 등록 확대 : ('16) 113개소 → ('22) 300개소 이상

* 지자체 조사기관 확대 : ('16) 4개소 → ('22) 10개소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수산물 유통체계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거점 시설 등의 적기 재원 확보 필요**

○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국고 지원 절실

* 2017~2021년까지 관련 유통시설에 국고지원 1,667억원 필요

□ **높아진 소비자 의식에 부합하는 유통질서 정착 필요**

○ 수산물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제 및 수산물이력제 정착을 위해 공급자 인식 제고 및 관련 교육·홍보 강화

□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최근 저염식단 등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 적극 홍보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해당없음

성과목표 II-3 수산식품가공 산업과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수출형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

○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간편·편의식품, 건강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新수산식품 연구·개발 본격 추진

□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산물 수출 확대**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정보 제공 강화, 경영여건 개선 지원 등 영세한 수산업계의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 글로벌 수출 스타품목 육성, 수출마케팅 강화, 수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수산가공식품 인프라 구축**

○ 주요 산지별 수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가공·R&D·물류·수출 기능이 집적·연계된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사업 대상지별로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경제성·효과성 등 사업타당성 분석 후 조성

* 지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17)

- 국내 수산가공식품산업 고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가공식품 R&D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 新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수출경쟁력 있는 수산식품 개발

○ '상품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수출목적형 프리미엄 상품* 개발 추진

* 사례 : 굴 고로케, 전복탕, 에너지바, 김 스낵 등 수출시장 특화상품 개발

○ 수산식품 고품질화,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가공·유통상 안전·관리 시스템, 수산가공 기자재 등 수산식품 핵심기술 개발

□ 수산물 수출 강소기업 육성

○ 해외시장분석센터(KMI)를 통해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수출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컨설팅 강화

○ 수출업체의 원료 수매 및 경영자금, 가공업체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시장 다변화 추진

○ 초보 수출기업의 판로개척, 수출애로 현지 해소 등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수출지원센터와 연계 시장개척단 파견

* ('16) 3개소(상해, 청도, 북경) → ('17) 7개소(미·일·베트남·대만 추가) → ('18~) 10개소(북미·EU·아세안 추가) 이상

○ 국제박람회 참가, 전세계 동시 집중 마케팅(한국 수산물 주간),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 성과 중심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수출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강화를 위해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해외 상표권을 확대하는 등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 수출 효자품목인 김에 대해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 수출 등 산업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김 산업 종합 발전방안' 수립

□ 수산물에 특화된 수출인프라 구축

○ 고부가가치 활어패류 수출을 위해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특수 컨테이너 제작과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 운영

○ 해외 진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내륙 물류망 확보 및 운송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수산식품이 건강식으로 인식되면서 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FAO) : ('60년대) 9.9kg → ('14) 20.3kg → ('25^{e}) 21.8kg

○ 반면, 우리나라의 수산가공산업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30% 수준으로 낮은 단계

* 가공수산물 수출 비중(%) : ('14) 32.0 → ('15) 34.8 → ('16) 34.2

□ 중국 사드 이슈 등 비관세장벽 강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

○ 특히,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환율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확실성 극복을위한 철저한 대비 필요

□ 수산물 수출업체는 증가세('12년 2,107개 → '16년 2,249개)에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영세한 수준

○ 중소기업 수출이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7.1% 차지하여, 글로벌 식품으로 발전하기 위한 수출역량이 부족

성과목표 II-4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로 귀어귀촌을 확대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킨다.

(1) 주요 내용

□ **어촌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통한 행복 어촌마을 조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테마마을 조성**(10개소), 주민과 귀어·귀촌인이 어울려 사는 **漁울림마을 조성**(20개소) 등으로 어촌활력 제고

○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개발사업**('18~, 850억원, 31개 시·군)을 실시하여, **어촌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조성

□ **어촌 문화와 관광의 자원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 증대**

○ 어촌의 고유 어업문화 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하여 어촌 관광자원화 도모

○ 양적으로 성장한 112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질적 개선**(체험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어촌 조성

○ 주민의 역량강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위해 **어촌 특화사업** 확대

□ **수산업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특화어항 개발**

○ **국가어항을 수산 기능**에서 지역민의 **힐링·웰빙 공간**으로 탈바꿈

○ **신규어항을 지정**하여, 서·남해권 **어선안전수용률 제고** 및 **환경개선**

□ **복지어촌 조성을 위한 어가 소득 안정**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 소득 안정**

○ **재해·안전보험을 강화**하여, 어가 **피해보전** 및 **소득 안정성 확보**

□ 한·미 FTA 및 한·중 FTA 보완대책 등 관리 강화

○ 한·미 FTA 발효('12.3) 5년차, 한·중 FTA 발효('15.12) 2년차에 따른 우리 수산업의 피해, 어업인 지원 대책의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어업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어촌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통한 행복한 어촌마을 조성

○ 어촌 중심지(어항배후지 등)와 주변지역을 통합 개발하는 **권역단위 거점개발**,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주도의 **마을단위 특화개발** 추진

* 권역단위 거점개발(8개소 내외/100억원 내), 마을단위 특화개발(20개소 내외/20억원 내)

○ **어촌주민**과 **귀어·귀촌인**이 어우러져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가능한 **漁울림 마을*** **20개소 조성**('22)

* 해역별(동·서·남해) 특성을 반영하고, 자족기능을 갖춘(생활기반시설+의료·복지·문화·교육·편의시설) 유형별(소득형·은퇴형·휴양형·복합형) 신규마을 조성

○ 어촌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과 어촌관광 수요증가 등을 고려한 어촌관광 명소인 **10대 명품 어촌테마마을*** 조성('22)

* 테마마을 유형 : ①색채·경관형, ②문화·역사형, ③레저형, ④웰빙형(휴식·치유), ⑤생태형, ⑥어촌·어항 연계형, ⑦복합형(①～⑥유형을 2개 이상 복합) 등

□ 어촌 문화와 관광의 자원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 증대

○ 어촌의 고유 어업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관리하고, 이를 **국내외 관광명소로 활용**

*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 신안 천일염업 지정('17. 2개소 신규추진)

○ **어촌민박 가능지역**을 바닷가 동(洞) 지역까지 **확대**하고, **어촌체험마을 등급 정보제공** 및 **시설 고도화**로 관광·체험객 만족도 제고

* 어촌민박시설, 안내소 등 체험마을 시설 개선(5개소, 10억원 지원)

○ 전국 12개 시·도(연안·내수면, '21)에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창업 컨설팅, 유통·판매** 및 **홍보 지원**

* 어촌특화지원센터 : ('17) 4개소 → ('18) 6 → ('19) 8 → ('20) 10 → ('21) 12

□ **수산업과 해양문화가 공존하는 어항 개발**

○ 어항 내 위판장 등 **어항시설**에 대한 **위생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생활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형 **청정어항 조성**

○ **다기능**(관광·휴양·문화·복지 등)**어항** 개발(10개항)로 휴식·힐링공간 조성

○ 자연경관,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아름다운 어항**으로 개발(4개항)

○ 서·남해안 지역의 **어항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5개항 지정)

○ **노후 어항관리선 대체건조**(1척 완료, 7척 발주) 등으로 **클린어항 조성**

□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全 도서 확대 및 직불금 인상**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全 도서 확대를 위한 수산 직불제법 개정('18) 및 직불금 단가의 단계적 인상*('17~'21)

* ('17) 어가당 55만원/연 → ('18) 60 → ('19) 65 → ('20) 70 → ('21) 75

□ **어업인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형태의 재해보험상품 개발 및 영세어업인에 대한 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어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 가입률 제고

* 대상품목(종묘) 추가 : ('18) 1개(전복) → ('19~20) 2개(넙치, 조피볼락)
** 어업수입보장보험 도입(시범사업) : ('18) 1개(김) → ('19) 2개(넙치, 멍게)

○ **영세어업인**(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 상품 개발·보급**

* 영세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 ('17) 50% → ('18) 60 → ('19) 70

□ **한·미 FTA 및 한·중 FTA 보완대책 등 관리 강화**

○ FTA 대책*의 어업인지원 효과와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2018년 투자·융자 계획 등에 반영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

* ('16년 기준) 해외시장개척,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30개 사업(2,844억원 규모) 추진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수산분야 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산업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 FTA 피해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보전·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 FTA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 사업을 지원(산업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어촌 개발(소프트·하드웨어)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주민·도시민·귀어인 등) 간 **양보·타협**과 **어촌다움의 내실화** 필요

○ **사업계획 수립 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지역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수행

○ **'어촌다움'**으로 **경관·환경** 등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어촌마을 개발** 필요

□ 관광기능을 보유한 **특화어항을 개발**하고 있으나, **주변사업과 연계부족** 및 민간투자 저조로 **기대효과가 다소 미흡**

○ 어항구역 내 어업인과 해양 레저객들의 선양장 등 어항시설 이용 마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어촌마을 홍보창구인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을 운영하고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다양한 어촌관광정보 제공

전략목표 Ⅲ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한다.

기 본 방 향

주요목표 ('16→21)	· 연근해 어획량: 93만톤→105만톤 · 귀어귀촌인: 약 1,000명 → 약 1,800명 · 해양수질(1등급 정점비율): 49% → 55%

◇ **우리바다 되살리기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한다.**

○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휴어제를 도입하고, 어린물고기 보호 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 어구관리 선진화, 안전·복지 중심의 어선현대화 기반 구축 및 어업 특성을 고려한 어선감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 수산자원 조성 및 조사 인프라 구축,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강화 등을 통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 국가어업지도선 확충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어업관리 역량 강화로 우리바다 되살리기 추진

◇ **해양수질·생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이용을 실현한다.**

○ 연안·EEZ 등 관할해역 전체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통합관리 실시, 빅데이터 기반 해양수산정보 통합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강화

○ 해역수질 개선 및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연안오염총량 관리제 확대, 해양폐기물 등 위해요소의 체계적 관리 등 추진

○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확대, 해양생물 개체수 회복 및 유해생물 안전관리 등으로 생태계 건강성 확보

< 전략목표 Ⅲ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20	'21
Ⅲ-1.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한다. [연근해어업 생산량(만톤)]	93	95	100	100	105	105
Ⅲ-2.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한다. [해양수질 개선율 %]	49.2	48	50	51.5	53.0	55

성과목표 III-1 국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한다.

(1) 주요 내용

□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휴어제' 도입·실시, 어린물고기 보호** 및 어업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어선감척** 추진

○ **어구 관리체계 구축, 연근해 생산단체 지원** 등을 통한 선진 수산관리체계 구축

□ 유류 과소비형 **노후화**된 **어선구조**를 어선원의 복지·안전을 감안한 **현대적 구조**로 **대체 건조**토록 지원

○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업종별 어선톤수** 상한규제 **완화**와 에너지 과소비형 노후어선을 **표준선형**으로 **대체 지원**

□ **수산자원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

○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수산자원관리 체계 구축

○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로 어업인 자율적인 어장 및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어획량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추진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추진**

○ 연안바다목장 및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확충**하고 종자방류 등 **자원증강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

○ 갯녹음 발생해역에 대해 바다숲 조성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 및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한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홍보 등 추진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관리 역량 강화**

○ 국가어업지도선 확충 및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등 어업관리 조직역량 강화

○ 중국어선에 식별장치(전자허가증) 부착, 전용 위성망 확충 등을 통한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용 고도화 등 **한·중 공동대응체계 구축**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적 협력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연근해어업 어획노력량 감축 및 관리 강화**

○ 단기간내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 효과가 큰 **휴어제 도입·실시**('18~)

* 사업초기에는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업종(대형선망, 외끌이대형저인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향후 성과를 고려 점진적 확대

○ 어업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어선감척***을 추진하고, **자율감척 대상 어업**** 및 **실직어선원 지원***** 확대

* 양적감척 → (근해) 혼획·남획업종 중심, (연안) 어촌안정화 및 고령은퇴·복지 중심
** (기존) 32개 어선 → (확대) 41개 어선·어구 / *** 통상임금 2 → 6개월

○ **어구 관리체계 강화*** 및 **생분해성 어구보급 확대**** 등을 통한 선진 수산관리체계 구축

* 어구자동식별장치 개발('21.하) / ** 생분해성 어구보급 확대 : ('17) 516척 → (~'22) 매년 580척

□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연근해 **생산단체 지원***을 통한 연근해 어업 품목별 자원관리 및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생산자단체(누계) : ('17) 6 → ('18～'22) 12개소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 지원, 노후기관·장비 교체 확대** 등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노후어선 구조개혁 추진**

* 친환경 어선으로 건조 시 보조금 지원, 건조자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 노후기관·장비 교체 지원 : ('17) 65 → ('18～'21) 260억원

□ **안전·복지 중심으로 어선관리 체계 정비**

○ 현행 **톤수**(선복량) **중심**의 **어선등록기준**을 수산자원 관리, **안전** 및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 재정비(톤수기준→길이기준)

* 어선등록제도(길이기준) 시범운영('17～'18), 본격 시행(수산업법 개정 이후)

○ 어업인의 안전·복지와 비용절감을 위해 업종별 **차세대 한국형 표준어선 개발** 및 **시험조업** 추진('17～'20, 연근해 10개 업종)

* 기선권현망('15～'17), 대형선망('16～'19), 근해연승·자망·채낚기 등 ('17～'19) / 연안어선('17～'20)

□ **수산자원 회복 프로젝트 추진**

○ **(명태 자원 회복)** 명태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종자 생산 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 명태 방류 추진**

* 한해성 종자생산 센터 구축(48억원) / ** '18년 이후 100만미 방류 지속 추진

○ **(수산자원 관리 강화)** 총어획량관리제도(TAC) 대상 확대하고 **어획량 보고·관리 체계 정비**를 추진

* TAC 2개 어종 확대('22), 전자어획관리시스템 구축('20), 수산자원조사원 단계적 확충('17～)

○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확충)** 연차별 수산자원조사 전용 조사선을 건조하고 조사·평가 전담 인력 추가 확보

* 수산자원조사선 신조 : ('18) 1,000톤급 1척 → ('20) 1,500톤급 1척

□ 산란·서식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체계 구축

○ **(바다목장 조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종자 방류 등을 통해 **수산자원 증강**

* 실적(누계) : '10년(5개소) → '17년(30개소) → '22년(50개소 예정)

○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자원회복 대상종을 중심으로 자연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공급 거점 마련**

* 대상품종(지역) : 주꾸미(보령,태안) 바지락(홍성), 대문어(동해), 대게(울진,영덕) 등

○ **(바다숲 조성)** 갯녹음 발생 원인분석 및 자연암반 개선, 모조 주머니 시설 등 친환경적 바다숲 조성기법 확대

* 실적(누계) : '10년(371ha) → '17년(15,251ha) → '22년(30,251ha 예정)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관리 역량 강화

○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및 **어업관리 조직역량 강화**

- '18년까지 지도선 신조(4척) 및 노후 지도선 대체건조(3척)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남해어업관리단 신설(7.19.) 등 조직 역량 구축

○ 한·중 협력을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방안 마련**

- 중국어선에 식별장치(전자허가증) 부착, 전용 위성망 확충 등을 통한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고도화('18.12.) 등 **한·중 공동대응체계 구축**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적 협력*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한·중 공동순시, 교차승선 실시 및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 한-중간 외교채널과 정례협의회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 및 중국지역 외교공관과의 유기적인 대응 강화(외교부 협조)

*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 외교채널 가동, 협력회의 개최, 중국 외교공관 담당관회의 개최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어획량 감소, 기후변화 등 어업 여건 변화

○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6년에는 '7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됨

○ 해수온도 상승으로 난류성 어류의 어획 비중이 증가하는 등 생산어종이 변화하는 추세

*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수온은 1.11℃ 상승하여 세계 평균(0.38℃) 보다 약 3배 높음

□ 연근해어업 업종간-지역간 어업갈등은 지속될 전망

○ **지속적 어선감척**에도 불구, 자원량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으로 인한 경쟁조업 및 **어업분쟁 지속**

* 어선 척수는 어업 자원량에 비해 16% 과도한 것으로 평가('11)
* 어선 감척실적('94～'16) : 19,674척 / 16,749억원

□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수산자원 변동 심화

○ 연근해어업 총생산량은 감소 추세이며, 최근 10년간 생산량*이 평균 113만톤이고, **'16년은 93만톤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

* 최근 10년간 생산량 : ('08) 128만톤 → ('10) 113 → ('12) 109 → ('14) 106 → ('16) 93

○ 우리 EEZ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존, 일본 및 중국과의 입어불균형, 조업조건 강화 등에 따라 **어장은 갈수록 축소**

□ **시장개방 가속화 및 국제기구의 규제 강화 전망**

○ 한·EU,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시장 확대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

○ WTO-DDA 등 **국제기구**에서 수산보조금 축소(면세유 등) 및 자원 고갈 우려 어종에 대한 **포획규제 강화도 예상**

* 실뱀장어 자원량 감소에 따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멸종위기 품종 지정 추진 등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안정적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fira.or.kr)

○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사업 보고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성과목표 III-2 해양수질·생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이용을 실현한다.

(1) 주요 내용

□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통하여 **해양수산자원 확대** 등 **풍요롭고 살기좋은 어촌**조성에 **기여**

○ 육·해상 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량 저감** 등으로 **해역수질 개선** 및 **해양환경 보호**

○ 해양생물의 **서식·산란지**를 **보호**하고, **개체수 회복**과 보호생물 및 유해·교란생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생물 종 다양성 확보**

○ 해양의 **환경관리 패러다임**을 **先계획 後이용**(기존 : 선점식 이용)으로 전환하고, 연안·EEZ 등 해양공간을 포괄하는 **전 해역**의 **통합관리**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오염해역 수질개선 및 오염원 관리 강화**

○ 오염이 심각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염도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 **울산연안**('17), **광양만**('19) 등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및 **총량관리 대상항목 확대** 추진

□ **해양오염사고 관리 선진화**

○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및 **교육**, 업체의 **자율관리** 등을 통하여 **해양오염사고 저감**

○ 허베이스피리트호('07.12) 사고와 같은 악천후 및 외해에서의 **대형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추진

□ **해양폐기물 등 수거 및 관리 강화**

○ **해양폐기물법 제정** 및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19~'23) 수립 등 **해양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추진

○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어업용 폐스티로폼**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오염에 취약한 **반폐쇄성 해역**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 해양개발·이용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체계 구축**

□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연안과 EEZ를 포함한 전 해역 통합관리를 위해 **해역별 공간 특성평가**를 통한 **용도 구획**과 **관리방향** 등 **해양공간계획 수립**

○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통합** 및 **민간개방**으로 해양개발·이용계획의 **친환경적 수립** 지원 및 정보활용성 제고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폐염전·양식장 등의 **갯벌복원 확대**를 통하여 해양생물의 **서식·산란지 보호**

□ **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 **개체수 회복**, 해양동물 **구조·치료** 및 **해양보호생물의 지정·관리** 등을 통한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

○ 해양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유해해양생물 신규 지정, 제거** 및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생태계 **위협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양관할권(443천㎢)은 육지면적(99천㎢)의 4.5배에 달함에도 불구 **공간의 특성, 수요,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컨트롤타워 부재**

○ 연안오염총량관리 적용, 특별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갯벌복원사업 등의 추진시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발생**

○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시행 중에도 인간활동에 의한 해양환경의 **교란**은 **지속·심화**되는 등 **다양한 외생변수 존재**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등 해양환경 분야 법정 계획 및 법령 제·개정 사항

전략목표IV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경제영토를 확장하여 해양수산자원을 확보·활용한다.

기 본 방 향

주요목표 ('21)	· 독도·이어도 등 과학조사 학술성과: 66건(누계) · 해경선·어업지도선 접안시설 확보: 0→1,585m · 극지 코리안 루트 개척: 0→2,100km · 원양수산자원: 453 → 566천톤

◇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한다.**

○ 해양주권 및 해양관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 도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

○ 해양주권의 상징인 독도 및 관할해역의 과학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종합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해양과학조사 및 영토 거점화 확대

○ 국가 끝단 도서의 접근성 강화,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 한·중 이어도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한 전략적 국가 연안항 개발 및 접안시설 등 인프라 확충

◇ **극지·대양 진출, 해양자원 산업화를 통해 해양자원을 확보·활용한다.**

○ 극지 기본계획 수립, 근거법률 마련을 통해 극지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후변화 등 全지구적 이슈 관련 대양탐사·연구도 확대

○ 북극항로 상업운항, 심해저 광물자원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해양자원을 상업화 하고, 해양에너지와 해양심층수의 산업화 기반 마련

◇ **전략적 국제협력으로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한다.**

○ 전략적 ODA와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

○ 원양어업 해외진출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국제기구인 세계수산대학(WFU) 설립을 통해 국제사회 위상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 전략목표 Ⅳ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20	'21
Ⅳ-1.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한다						
[해경선·어업지도선 접안시설 확충(m)]		420	780	1,115	1,455	1,585
Ⅳ-2. 극지, 대양 진출 및 해양자원 산업화를 통해 국내·외 해양자원을 확보·활용한다.						
[남극 내륙 진출루트 개척률(㎞)]	-	300	700	1,100	1,500	2,100
[해양에너지 전력공급(가구수)]	-	120	500	1,000	3,000	3,500
Ⅳ-3.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한다.						
[원양어업생산량(천톤)]	453	566	566	566	566	566

성과목표 Ⅳ-1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도서의 체계적 관리·이용 확대**

○ **전국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 등 **체계적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주요 무인도서 **현황도 제작**

* 무인도서 실태조사 시범조사(80개소, '17년)/무인도서 현황도 제작(15개)

○ **독도 중장기계획 수립** 등 독도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및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

* 제3차('16～'2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름

- 독도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독도 교육·홍보도 강화

□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및 인프라 확충**

○ 영해기점에 영구시설물 설치* 등 **해양영토 기점 관리 강화**

* '17년 외간서·성근여·소령도 3개 설치 추진('16년까지 6개 설치 완료)

○ 종합해양과학기지(이어도, 소청초, 가거초) 기지를 활용한 해양 관측 활동 등 **체류형 연구 활성화 추진**

* '14～'16년까지 이어도기지 체류형 연구를 통해 26개 기관에서 49개 과제 수행,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정보포털서비스(가칭)' 도 추진

□ **해양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관리 연안항 인프라 확충**

○ 국가 끝단 도서의 접근성 강화,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 한·중 이어도영유권 분쟁 대비를 위한 **전략적 국가 연안항 개발**

○ 해경·해군 함정의 대응력 강화 및 불법어선 단속을 위해 핵심거점에 **국가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확충**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도서의 체계적 관리.이용 확대**

○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무인도서 등 해양영토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및 변경, 명예관리원 위촉·관리 등을 통한 무인도서의 생태·환경적 가치 보전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기반 마련**

○ 독도와 주변해역 생태계 조사 등 **독도 지속가능이용연구 계속**

- 해양생태계 조사('17.2~12월), 드론을 활용한 독도 지형 조사 등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전 전문가, 지자체 등 합동 현장조사, 소유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실시

□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및 인프라 확충**

○ (**과학기술 개발**) 종합해양과학기지(이어도, 소청초, 가거초) 활용연구 확대 및 순수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 종합해양과학기지 기반 조사 현황, 체류형 연구 및 관련 성과 등 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과학기지정보포털서비스(가칭)' 제작**

○ (**국제협력 확대**) 우리말 해양지명 등재, 국제해양지명위원회 국내 유치, 동해표기 연구성과 게재 등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전문인력 양성**) 국제시추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원)생을 위한 summer school 등 **단기 연수 프로그램 확대**

○ (**현장의견 정책반영 계획**) 해양과학조사 추진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부처 및 산·학·연 의견수렴

- 종합해양과학기지 활용 연구 활성화, **해양과학조사 R&D 발전 워크숍 개최**(12월)

□ **국가관리연안항 개발 추진**

○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에 해경선 및 어업지도선 **접안시설 확보**

* 국가관리연안항(11개) :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대흑산도항, 추자항, 가거향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사동항, 화순항

○ 영토 거점으로서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양경비 시설 확충**

* 전국 9개 항만(인천, 평택당진, 군산, 대천, 완도, 제주, 여수, 울산, 포항)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경선 및 어업지도선 접안시설 등 추진시 이해관계 대립**

○ 사업추진시 지역민의 반대가 예상되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해.설득 필요

□ **도서의 체계적 관리·이용 확대**

○ 이해관계집단(토지소유자·지자체·환경단체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시 등 이해관계자별 설득·대응 필요

○ 독도 관련 사업 추진시 안전·환경·문화재경관 보존 및 외교관계 등과 상충될 우려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Ⅳ-2 극지·대양 진출 및 해양자원 산업화를 통해 해양자원을 확보·활용한다.

(1) 주요 내용

□ **해양 과학영토 확대**를 위해 **극지·대양**에 **본격적 진출** 추진

○ **극지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근거법률 마련**을 통해 극지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용화 중심**의 **극지연구**를 활성화

○ 전 지구적 이슈에 대응하는 **국제공동연구 추진**과 연구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통해 **대양연구**를 **확대**

□ **북극항로 상업운항, 심해저 광물자원**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법적 근거 확보 등**을 통해 극지·대양 경제영토 개척 기반 마련

○ 북극해항로 **정보공유**, 러시아 등 **연안국 협력 및 선·화주 지원**을 통한 북극해항로 상업 운항 촉진

○ **심해저 광물자원**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해저기구(ISA) 개발규칙 제정에 대응

□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육성**과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수중건설로봇 개발**을 통해 해양자원 개발 기반 구축

○ **해양심층수 자원**을 다양한 산업의 **소재·원료**로 **개발**하여 **미래 융·복합 신산업**으로 **육성**

○ **선진국 수준**의 **해양에너지 발전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해양**에너지 개발 확대** 및 세계시장 진출 추진

○ 해양 개발의 핵심요소기술인 **수중건설로봇**을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건설 등**에 **활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체계적인 **극지·대양 정책 수립**을 위해 **법·제도**와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의 내실화를 도모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17~'21), **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을 추진

○ 남극점 코리안루트*와 연계한 **세계최초 남극 2,000m급 빙저호 탐사**('17~'20)와 **생물자원연구**('17~21) 등 **연구영역 확대**

*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남극점에 이르는 독자적 육상루트(코리안루트, 3,000km)

○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북서태평양 태풍 예측, 해양-기후변화 원인 규명, 인도양 심해저 新열수구 탐사**('17~'21) 등 추진

□ **북극항로 상업운항 촉진 지원**

○ '북극해항로 활용 지원 민관협의체' 운영(반기 1회), 러시아·노르웨이 등 **북극 연안국과 협력 방안 협의** 및 **국제세미나**(매년) 개최

○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 운항인력에 대한 훈련 및 자격요건*"에 맞는 **운항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17) 및 **양성**(계속) 추진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시행('18.7.1)

□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화 단계 진입에 대비한 기반 확충**

○ **비즈모델** 수립, 국제해저기구(ISA) 개발규칙 제정 등에 대응

○ **태평양 망간단괴**('16~'20 계약연장) 광물 **가채량 분석**, 인도양 해저 열수광상과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에 대한 **자원량 조사**('17~'21) 및 개발유망지역 선별 등 **국제해저기구(ISA) 의무이행 사항 이행**

□ **파력, 조류,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산업화 기반 마련**

○ **파력**('16~'19) **및 조류발전**('17~'21) **실해역 시험장 구축**을 통해 대규모 상업용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1MW급 해수온도차발전플랜트**를 **개발**과 **키리바시**에서 **실해역 실증**('16~'20) 실시 후 적도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

□ **해양심층수**를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

○ **해양심층수 자원**을 **식·음료, 화장품, 양식, 관광산업의 소재·원료**로 **개발** 등을 통해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 **해양심층수 연구개발**의 **지속 확대**와 **산업계 근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16~'18, 강원 고성)" **건립**

□ **해양 개발의 핵심요소기술인 수중건설로봇 개발 추진**

○ 수중에서 활용 가능한 건설 장비 개념의 **로봇 3종 개발**('13~18)을 통한 **해양 구조물 시공** 및 **해저 자원개발 동력 확보**

* 경작업용 ROV, 중작업용 ROV, 트랙기반 해저 중작업용 로봇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극지의 경제 잠재력**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중대형 쇄빙연구선** 등의 **인프라 투자와 국제적 거버넌스 확대**

* (러) 북극 개발 2020년 계획수립('16.1), (일) 핀란드와 "북극권 개발 협력 공동성명" 체결('16.3), (중국·독일·캐나다) 중대형 쇄빙선 건조(11,000~27,000톤급)

○ **남극과학위원회**(SCAR)에서는 향후 20년간 우선해야 할 **남극연구 6대 분야**와 **80개 과제**를 담은 **중장기 비전**(Horizon Scan) **발표**('14.8)

* 남극의 대기·해양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질, 생물, 천문, 대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분야의 포함

□ **대양 공해상**의 **생명자원**에 대한 **BBNJ*등 UN규제 움직임**의 **가시화**로 **탐사 연구**가 **시급**하며, 지구 온난화 등 대응을 위한 연구 확대 필요

* BBNJ(Marine Bio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 공해역 생물자원 개발이익 공유체제로 UN차원에서 '18년 입법을 추진 중

□ 국제해저기구(ISA)에서는 공해상 광종별 **「탐사규칙」** 제정('00년 망간단괴, '10년 해저열수광상, '12년 망간각) 및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 예정('20)

○ **공해상 해저열수광상**(6개*) 및 **망간각**(4개**) **독점탐사광구 등록**은 모두 **'11년 이후**에 **정부 주도**로 추진

* 중국・러시아・한국・프랑스・인도・독일 / ** 일본・중국・러시아・브라질

○ **망간단괴는** '10년 이후부터 민간기업이 **독점탐사광구를 확보**

*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는 총 17개('87 이후)로, '10년 이전 8개는 정부 주도, 이후 9개는 민간기업(캐나다 노틸러스, 미국 록히드마틴, 중국 오광그룹 등)이 주도

□ **파리 기후변화협약**('15.12)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지원**이 **강화**되는 추세

* '50년까지 미국은 파력발전만으로 전력수요의 7%를 공급 계획이며, EU는 수요전력의 15%를 해양에너지로 대체할 계획

□ 해양심층수 산업은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이나 규모화된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초기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

* 해양심층수 시장 규모 : 일본('10, 3조원), 대만('12, 7천억원), 한국('14, 110억원)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 '17.5(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 **극지활동진흥법안** : '16.12(안상수 의원 발의, 농해수위 계류중)

□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 : '00.8**(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성과목표 Ⅳ-3 전략적 국제협력으로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한다.

(1) 주요 내용

□ **전략적 ODA와 양자협의를 통한 해양수산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ODA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중점협력국 선정·지원, ODA 패키지 개발, ODA 센터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행**
- 국제기구 진출확대, 옵서버 육성 등 **국제업무 역량 제고**

□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연안국 자원자국화, 공해조업규제 강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추진**

- 해외 신어장 개척 및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 해외 수역에서의 **안정적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 안전관리 강화, 원양어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전부 개정 추진

□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추진**

○ 개도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의 수산업 교육을 기반으로 성**장한 경험을 개도국에게 전수**

-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17~'19년(18개월) 동안 추진, '17년부터 교수채용 및 학생모집 절차를 거쳐 **'17.9월 시범사업 개교**
-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WFU 설립을 위한 FAO 등 국제기구 의사결정기구 대응 및 회원국 지지 확보 등 추진

□ **수산분야 국제협력 협상의 체계적 추진**

○ DDA/FTA협상에서 어업분야 민감성을 확보하여 수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국 시장 적극 개방**

○ 어업인 및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FTA 진행상황 및 협상결과 설명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갈등요소 최소화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전략적 ODA와 양자협의를 통한 해양수산산업 해외진출 지원**

○ **(ODA확대)** 중점협력국가* 중심으로 ODA 중장기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ODA 사업발굴** 및 **국제기구 공조강화**

* 세네갈, 피지, 시에라리온, 키리바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페루 등

○ **(양자협의 확대)** 연안국과의 양자협의 및 고위급 접촉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진출도모**

- 해양수산 MOU 실효성 확보와 우리 해양수산업의 해외시장 활로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양자협의 및 기업 진출지원 추진

○ **(국제업무 역량제고)** 국제기구 진출 확대, 옵서버 육성 등 국제업무 역량을 제고하여 **해양수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진출지원방안 수립('17.1), 신규옵서버 채용 및 정기교육 실시

- 해외주재관 및 명예해양수산관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현장의견 정책반영 계획)** 연안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 등 사업 추진에 앞서 업계·학계·협회·연구기관 등과의 사전 간담회 개최

□ 해외 수산물 공급 기반 확충

○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원양 경쟁력 강화, 선박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노후 원양어선대상 현대화사업 지원('17.4월)

- **(IUU어업 근절)**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방지 및 불법어획물의 국내시장 반입 차단을 위한 어획증명제도 도입('17.6월)

- **(제도 정비)** 안전관리 강화, 원양어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전부 개정 추진

  * 원양산업발전법 등 제·개정 연구(KMI, 한국법제연구원 / '16.8.2～'17.5.28)

- **(IUU 통제)** 조업감시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불법어업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계분석 기능 강화, 조업감시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감시기능 강화('17.10월)

○ **(해외어장 확보)** 안정적인 어장 확보를 위해 국제회의 국내 유치* 및 재정적·과학적 기여**와 IATTC(전미열대참치위),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위), ICCAT(대서양참치보전위) 등 국제수산기구 대응 강화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개최('17.8)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 태그 관련 연구(2억원),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FAD 개발 연구(1억원)

- **(조업쿼터 확보) 러 극동지역 수산투자 협력***을 통한 러시아 EEZ 수역 조업쿼터 확보 추진 및 해외 어장 개척 지원('17.1~12월)

  * 러 극동지역에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건설 추진을 위한 투자부지 확보 협의 등

○ **(현장과 소통 확대)** 원양분야 사업 지원 및 국제협상 추진에 앞서 업계·학계·협회·연구기관 등과의 사전 간담회 개최

- **(선원사기 진작)**원양어선 승선 중 순직하여 해외에 안장되어 있는 원양어선원 묘지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와 국내 이장 지원('17.3~12월)

□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추진

○ (FAO 사무국) FAO 의사결정기구 일정에 맞춘 선제적 대응

- (대응) 각 위원회 개최 전 주요 안건 검토 및 대응, 각 위원회 의장 및 간사, 사무국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연락체계 유지
- (약정) WFU 시범사업 관련 약정 체결 및 운영위원회 개최 진행
- (교섭) 주伊대사관에 직무파견 된 해양수산관을 통해 FAO 사무국 대응

○ (FAO 회원국) 다수 회원국 지지를 유지하면서, 반대 예상 국가 교섭

- (지지확보) 주伊대사관을 거점으로 지지 확보, 필요시 재외공관 동원
- (국제회의) WFU 시범사업 개원식, 어류교역소위 등 회원국 참석회의 개최
- (회원국 협력) 해양수산 ODA 및 양자협력 등 협력사업 발굴 추진

○ (국내대응) 민·관 협력을 통한 차질 없는 유치 추진

- (관계부처) WFU 설립진행 정보 공유 및 지지 교섭 등 협력 추진
- (지자체) WFU 시범사업 개원식 및 어류교역소위 행사 공동 추진
- (대학)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교수채용 및 학생모집 등 행정적 지원

□ 주요 통상 협상 시 수산분야 전략적 대응

○ (통상전략 마련) 기추진 FTA 효과 및 주요어종의 시계열 통계분석과 수산보조금 규율 국제논의에 선제적 대응 등으로 협상능력 제고

- (旣추진 FTA) RCEP, 한·중·일, 한-에콰, 한-중미, 한-이 등의 협상 진행 사항을 분석하고 '공통·개별 양허전략 마련'('17.7) 및 협상대응(수시)
- (旣체결 FTA) 한·미, 한·인도 등 추가 개선협상안 마련('17.2) 및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성실 이행

- (신규 FTA) 한-멕시코, 한-메르코수르 등 상대국 수산물 소비현황 및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등

- (WTO/DDA) WTO 각료회의('17.12) 수산보조금 논의 대응을 위한 각국 제안서 검토(수시) 등 우리 대응전략 마련

  * WTO 제11차 각료회의 대비 수산보조금 협상전략 마련연구 용역('17.2)
  * 수산보조금 등 전문가 포럼을 운영(수시)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 **(대책회의 운영)** 협상 대비 사전 및 사후 대책회의(연중)를 통해 협상 역량 강화 및 **'대책-협상-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 기 구축된 각종 협의회에 적극 대응하여 부처 간 공조 추진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실무작업반회의, 통상추진위원회 등

○ **(수입수산물 체계적 관리)** 저율관세할당(TRQ) 관리기능 강화 및 수산물 관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수입수산물 관리체계 효율화

- (TRQ 관리) FTA별, 품목별 TRQ 효과 및 영향 분석 추진('17.4)

- (탄력관세 운영) 조정·할당관세 운영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 분야 해당품목 이익대변

○ **(현장의견 정책반영 계획)**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권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홍보 계획" 수립**('17.1)

- 주요 FTA 등 어업인 및 업계 설명회 개최(연중)

- 품목별 수산분야 전문가 및 지도자 간담회 개최(분기별)

  * 수산경영, 수산자원, 국제통상 전문가로 구성하여 상품 경쟁력 및 생산여건 분석, 민감·수출전략 품목 선정, 양허안 작성

- 카드뉴스, 웹툰 등 SNS(수시) 및 수산 전문지 릴레이 기고('17.9) 등을 통해 이해도 증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전략적 ODA와 양자협의를 통한 해양수산산업 해외진출 지원

○ 국제수산기구의 자원관리, 연안국의 규제강화 등 수산자원의 자국화 및 남태평양 등 주요 연안국은 조업국의 재정적 기여 요구 확대

○ 중점협력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ODA 사업 발굴, 국제기구 진출 확대, 옵서버 육성 등 국제업무 역량 제고, 연안국과의 양자 협의 및 고위급 접촉 확대 추진

□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수역 조업규제 및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 등으로 해외에서의 조업 여건이 악화되는 추세로 원양어업 생산량 및 쿼터확보가 매년 어려운 상황

○ 노후 원양어선 대상 현대화사업 지원, 안정적인 어장 확보를 위해 국제회의 국내유치 추진, 한-러 수산협력을 통한 러시아 EEZ 수역 조업쿼터 확보 추진

□ 세계수산대학(WFU) 유치

○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FAO 의사결정기구 대응 및 관련 회원국 지지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 주이탈리아대사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을 통한 회원국 지지 확보 및 국제기구 진출 주요인사 교섭활동 추진

* '17년 일정 : 이사회(4월) → 총회(7월) → 세계수산대학 개원식 및 어류교역소위(9월)→ 이사회(12월)

** 주요국 지지 현황 : 주요 회원국 및 분담금 상위국 등 61國 중 31國 지지('16.7)

□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분야에 대하여 지원대책 강화

○ TPP,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업인 피해지원을 강화할 필요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해양수산 국제 현황 및 동향

○ **(국제협력분야)**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조업규제는 강화**

* 세계1인당수산물소비량(kg, FAO) : ('80)11.5 → ('90)13.5 → ('00)15.8 → ('10)18.9 → ('13)19.7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FAO 등 국제기구는 **어업규제 강화**, 남태평양, 러시아 등 주요 연안국은 조업국의 **재정적 기여 요구 확대**

* 남태평양 입어료 상승(10천$/日) 및 러시아 자국에 미투자를 이유로 조업쿼터 축소 우려

○ **(원양산업분야) 원양어선 노후화,** 국제수산기구 자원 보호정책에 따른 **어장축소,** 선원 구인난, 주요품종 **어가하락** 등으로 **원양업계 경영악화**

* 원양선사(개소) : ('00) 139 → ('05) 112→ ('10) 90 → ('15) 67 → ('16) 51

** 원양어업허가(건수) : ('00) 535 → ('05) 410 → ('10) 353 → ('15) 289 → ('16) 255

○ **(통상협력분야)** 세계 정세변화로 한-미 FTA 재협상* 논의, TPP 폐기, 환경 등 신규 이슈와 교역의 연계 등 **통상정책 환경 변화**가 불가피

* 10년이상 장기철폐 품목(수입액 기준 35.8%)의 기간단축 및 TRQ 폐지 등 요구 예상

- 특히, WTO의 복수국간 협상, OECD·APEC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국제기구의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전략목표 Ⅴ	해양수산 신산업을 본격 상용화하고,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한다.

기 본 방 향

주요목표 ('16→'21)	· 해양레저서비스 창업: 476건 · 해양수산 스타트업 매년 100개 발굴

◇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하고 국민 레저 수요를 창출한다.**

○ 관광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리나, 수중레저, 등대 등 해양관광 산업기반을 구축, 새로운 국민레저수요를 창출하고 신규 관광산업 육성

◇ **해양신산업 상용화를 통해 국내시장 창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 해양플랜트 서비스, LNG 추진선박, 해양바이오 등 유망 해양신사업 분야 지원체계 마련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e-Navigation,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세계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대

◇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 맞춤형 해양수산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지리 마련

< 전략목표 Ⅴ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20	'21
Ⅴ-1. 해양관광레저산업을 통해 해양관광·레저산업						
[해양레저서비스기업 창업]	신규	230	276	331	397	476
[모항출항 크루즈 항차]	신규	45	50	50	55	55
Ⅴ-2. 해양신산업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시장을 창출한다. [해양신산업 투자유치 달성률]	신규	100	100	100	100	100
Ⅴ-3.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수(천명)]	신규	1348	1354	1360	1367	1374

성과목표 Ⅴ-1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하고 국민 레저 수요를 창출한다.

(1) 주요 내용

□ 마리나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국민레저수요 창출

○ 급증하는 마리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지점에 건설 중인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 완공

○ 수도권, 동남·서남해안권 등 권역별 **입지 특성**, 도시·어촌, 내륙·해수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리나 인프라 기능 확충**

○ **체험형 마리나 해양관광상품 개발**, **청년 벤처창업과 레저선박 제조기업 육성**을 통한 마리나산업 고도화

□ 해양관광 시장 확대를 통한 신규 관광산업 육성

○ 연안의 다양한 해양자원의 **치유 효능**을 **검증**하고 해양관광 대표 신산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제도, 산업화 방안 등 마련

○ **수중레저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중경관지구** 조성 추진

□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해외 Port-Sales 활동** 강화 및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내 크루즈 수요 창출, 크루즈 모항출항 확대 등을 통해 국내 항만을 **아시아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육성**

□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활성화로 해양관광 증진**

○ 문화행사 개최, 등대를 주제로 하는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양문화 향유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마리나 중심의 해양관광 활성화방안 마련**

○ 거점 마리나항만과 부산·경남 마리나 비즈센터 등 **지역 특화 마리나 인프라 조성** 및 상호 **기능 연계방안 마련**('18~'22)

* 울진 후포, 창원 명동, 여수 웅천, 안산 방아머리, 당진 왜목, 부산 운촌 등 6개소

**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우암부두, '18~'20, 420억원), 경남 비즈센터(통영시, '18~'20, 190억원)

○ 대학생 해양레저 **창업 공모전**과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17.12), 100ft급 대형요트 기술개발 및 시제선 건조 **연구용역** 추진(~'20)

* 연구기간/책임자 : '15년 ~ '19년(국비 210억원, 민간 70억원)/ ㈜푸른중공업

○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17.12)

* 상해보트쇼 한국관 개설(1억원), 중소레저선박 제조기업 해외보트쇼 참가지원(1억원)

□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 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관계기관 합동 **해외 Port-Sales 행사**를 개최하여 '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 유치**

* ('14년) 105 → ('18년) 195 → ('18년) 200 → ('20년) 300만명

○ 일반인 대상 **크루즈 관광체험단 모집, 방송 및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내 크루즈 인구 확대**

* 2천명 정원 기준 연간 운항(60항차)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요는 12만명, 이에 따라 '20년까지 20만명 목표로 수요확대 추진

○ 신규 기항지 요구와 크루즈 추가 유치를 위해 해양도시 및 도서 등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통한 **기항지 3개소 개발 추진**

* 연구용역 추진('17.下),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18.上), 기항지 선정('18.下), 항만기본계획 반영 등을 통해 기항지 조성 추진('19~)

○ 한-중-일, 한-러-일 등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외국 크루즈선사 등과 협력하여 **국내 모항 출항 크루즈 관광상품 확대**

* ('16년) 16항차 → ('17년) 45항차 → ('18년) 60항차 → ('21년) 120항차

□ 등대를 활용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해양문화 보급 추진

○ 유물관람·체험·교육·휴양이 가능한 복합해양문화공간기능의 국립등대박물관 확대건립('17~'21)

○ 무인화된 유인등대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관광명소로 개발('17~'21)

○ 청소년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등대 체험교실 운영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등대여권 및 등대이미지 상품(메달) 개발, 등대관련 사진·그림 공모전 개최

○ 국민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등대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발굴

* 등대여권 및 등대이미지 상품(메달) 개발, 등대관련 사진·그림 공모전 개최

□ 신규 관광산업 육성

○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17~'19)*를 통해 치유 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추진

* (R&D) 해양치유자원의 과학적 효능 검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실용화, 산업화 방안 마련, 개발가능 치유자원 DB 구축, 제도(안) 마련
* (가칭) 해양치유자원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법률('19년 시행 목표)

○ 권역별 **해중경관지구 지정** 추진('18.上)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마리나**) 귀족 스포츠라는 편견으로, 국가 주도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강함

□ (**크루즈**) 중국 크루즈 관광객의 높은 비중으로 한-중 **외교관계**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입항**이 **많은 영향**을 받음

□ (**해양치유**) 기반연구 계속사업비 반영과 법제화 추진 필요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마리나)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경제관계장관회의, '15.5),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6.10)

□ (**수중레저**) 수중레저산업 통계지표 개발 및 수중레저법 하위법령안 제정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1)

□ (**크루즈**) '16년 크루즈 관광객 195만명 입항을 통해 관광·쇼핑 등 소비지출(2조원), 항만수입(200억원), 선용품 수출(100억원) 등 경제효과 발생

* KMI, 관광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산출

□ **(등대) '등대문화사' 및 '등대와 바다(www.lighthouse.com)'**

○ 제주대 석좌교수인 주강현 작가가 등대를 소재로 집필한 '등대문화사'는 등대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작품

○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한 소개 및 행사개최 일정을 안내하는 '등대와 바다'를 통해 다양한 등대정보의 수집이 가능

성과목표 Ⅴ-2 해양신산업 상용화를 통해 국내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1) 주요 내용

□ 해양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新성장동력 창출

○ 해양플랜트 서비스, LNG 추진선박 등 유망신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주기별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 나고야 의정서 등 생물자원 국제협약에 대응하여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생물 유전체정보의 해독·정보 분석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생명자원 활용 신소재 기술개발 추진

□ e-Navigation,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세계시장 선점

○ IMO의 e-Navigation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IMO 승인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원천기술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해양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산업주기별 지원**) 산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신산업 로드맵**' 수립 추진(~'18.1)

- (**R&D**) 첨단 과학기술 활용(IoT, 드론 등)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지원**('17.3~)

- (**기술사업화**) 정부 중점 육성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42.5억)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50억원, '17.3~)

○ (**정책기반 강화**) 해양산업 **통계조사를 실시**('17.4~12)하고 결과를 분석한 **「OCEAN ECONOMY 2017」 발간**('17.12)

- '**해양신산업 전문가 협의체**'를 구축·**운영**('17.4) 결과와 주요 **동향에 대한 정보지를 제작**하여 신산업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17.7~)

○ (**현장의견 정책반영**) 정책의 대상자인 **산업계**를 비롯해 **관련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체계 구축·운영

- (**신산업**) 신산업 로드맵 구축을 위한 **자문단 협의회** 개최(3월, 12월) 및 주요분야별 '**신산업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견 수렴

- (**LNG**) 민·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LNG 산업 육성단' **협의회 정기 개최**(분기별) 및 **대토론회**(50개 기관 참석 목표, 4월) 개최 추진

- (**플랜트**) 해양플랜트 **발전협의회**(산·학·연 관계자 15명)을 개최하여(5월, 11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미나**(10월), **시장설명회**(12월) 등 개최

  *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상주) 및 **전문위원회 운영**(2, 4, 5월)을 통해 직종별 **교육 로드맵 수립**

○ (**플랜트산업 육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인니 해체 프로젝트 추진**('17.4) 및 타당성 조사 지원('17.1~)

-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17.10 준공)을 활용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 R&D 로드맵 수립('17.6), 핵심기술 개발('17~)

  * 심해공학수조 구축 및 기술개발, 해양플랜트 플로트 오버 설치기술개발 등

- 교육기관(한국해양대, 연수원 등)간 **체계적 협업**을 위한 **「교육 로드맵」**을 수립('17.9)하고, **국제인증** 교육프로그램 확대(2개)

- 유휴선박 등을 활용한 **新비즈니스 모델**(PPF*) **사업화 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증** 연구 용역 추진 및 **해외 진출 로드맵** 수립('17.11)

* (Prompt Port Facility) 중고선박 수요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기반설비로 활용하는 설비

○ (**LNG산업 육성**) 민·관 합동 **'LNG 산업 육성단'**을 구축하고, 정책 **추진 현황** 및 **신규 과제발굴**을 위한 **협의회 정기**(분기별) **개최**

- LNG **동향 변화, 협의회 결과 및 대토론회**('17.4) **결과** 등을 고려,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한 **부처 합동 후속대책 수립**('17.11)

-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기술** 개발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14~'18)

□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 (**정책기반 마련**)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 전반의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한 **중장기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수립**

-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현황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동향 정보지**를 발간하여 산업 현장에 제공('17~)

- 해양생명자원 확보·관리, 유망 소재 개발, 우수 기술 상용화, 창업·투자지원까지 포함하는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시행**('18~)

○ (**상용화 중심 R&D**) 산업 연계성이 부족했던 기존 R&D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시장성**이 **높은 유망기술** 위주로의 R&D 추진

* ('17) 기획연구 → ('18) 관계부처 협의 → ('19~) R&D 추진

○ (**자원확보・관리**) **해양바이오 원천소재 제공**을 위한 국내외 유용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 체계 강화**

-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 기탁등록보존기관 확대, 국가전략자원 선정, 등 중장기 자원 확보 전략 수립('17~)

- **해외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자원 부국(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17~)

-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에 대응하여 생물주권 증거자료 마련 및 활용촉진을 위한 국가 해양수산생물 목록집 작성('17~)

○ (**산업화 촉진**)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우수기술 인증 지원, 산・학・연 간담회 정례화 등 산업화 촉진 지원

-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생명자원 **컨설팅・정보제공** 및 원료소재 **분양** 등을 지원하는 **산업화 헬프데스크** 운영('17~)

- 해양바이오 선도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견수렴 정례화**('17~)

□ **e-Navigation,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세계시장 선점**

○ (**e-Nav 국제표준 선도**) e-Nav 관련 **신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 최적안전항로 지원, 선박모니터링 및 해사안전정보 제공 등 **한국형 e-Nav 서비스 Prototype**(시험모델) 연구·**개발**('17.12)

- 한국형 e-Nav 국제 브랜드화 등을 위한 **제1차 아·태 e-Nav 국제 컨퍼런스 개최**('17.6) 및 **e-Nav 표준화그룹 회의 의장국 역임**('17.10)

○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 선박평형수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 인증체계 구축**

- 국내 업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IMO 국제기준 대비 1,000배 강화된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개발('13~'17)
- 국내 보유기술 중심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IMO 국제회의 대응('17)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생물자원의 주권 강화 추세**

○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에 따라 자원 이용 시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과 발생이익 상호공유 등 의무사항에 대한 국제법상 효력 발생

- 인도, 중국, 호주 등 선진국과 동남아시아 등 생물자원 부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의 주권을 명시

□ **신규시장 형성에 따라 주도권 경쟁 심화 예상**

○ IMO의 e-Navigation 도입에 따라 향후 10년간 1,200조원(직접 300조원, 간접 900조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유럽·미국·일본 등 해운·조선기자재 선도국 중심으로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IMO 국제협약 발효에 따른 현존선박·신조선박에 대한 평형수처리 설비 설치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45조원의 세계시장이 형성될 전망

- 중국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업체 등 후발 개발업체들의 약진으로 경쟁 심화 예상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참고자료) 유망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총괄 또는 분야별 정책추진계획**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종합대책,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 방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방안 등

성과목표 V-3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 주요 내용

□ **맞춤형 해양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해양신산업 창업붐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창업·투자유치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창업지원기반 구축

□ **수산분야 강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는 기반을 마련

□ **수요자 맞춤형 해운인력 경쟁력 강화**

○ 전문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양질의 해기인력**을 **배출**하여 관련 **업계에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해운·수산업계의 발전** 도모

○ 해양플랜트 산업의 건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분야인 **해양플랜트 운영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

○ **안정적인 해기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해운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단기양성과정 운영**

□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를 통한 선원직 매력화**

○ **선원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젊고 유능한 인력을 선원직으로 유치하고 **장기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체감형 복지 확충**

○ 육상근로자 대비 상대적으로 임금격차 축소,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선원직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국적선원이 급감하고 있어, **임금채권 보장 확대, 의료서비스 등 선원근로여건 개선**

□ **어업인후계자 및 수산고 특성화교육 지원**

○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어업기반 조성** 및 **멘토링 지원**과 **수산계 고교생**에 대한 **취·창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미래 수산인력 육성**에 기여

(2)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맞춤형 해양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투자유치 지원**

- 투자 활성화 전략 마련('17.3), **투자 컨설팅**('17.4~),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 100개**' 선정 및 투자설명회 개최('17.8) 등 지원

○ '**해양신산업 전문가 협의체**' 구축·**운영**('17.4~)

○ '**해양신산업 동향 정보지 발간·배포**('17.7~)

○ '공공기술 기반 **해양신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수립('17.8)

○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 100개** 선정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17.8)

□ **수요자 맞춤형 해운인력 경쟁력 강화**

○ 전자해도(ECDIS) 및 기관모의조종 시뮬레이터 등 선진 교육장비 운용, 노후실습선 대체 등을 통한 국제협약(STCW) 및 업계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해기사 양성을 위해 **해사고 등 산업계 맞춤 교육**

○ 해사고 재학생이 교내 학사과정 내에서 해기사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승선실습체계 개선 및 신조 실습선 도입 추진**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종합 훈련장 등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14~'17)

○ **해운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해기사 단기양성과정**(외항어선 3급, 내항상선 5급, 원양어선 3급)인 오션폴리텍 운영

○ **해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 군에서 숙련된 우수한 해기인력의 업계공급 및 진출 지원

□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를 통한 선원직 매력화**

○ 장기간 원양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성통신을 활용한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원양어선 가족방문 등 가족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여 **체감형 복지 확대**,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권역별 복지 지원 사무소 설치**('17년 1개소), 교통편의시설 확충 등

○ 선원의 사망·부상·유기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유기구제 보험 가입 의무** 부과, 선사의 파산에 대비 **임금채권 보장한도 확대**(임금 3개월분/퇴직금 3년분→4개월분/4년분)

□ **어업인후계자 및 수산고 특성화교육 지원**

○ 어업인후계자 어업기반 조성 지원

- 정책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대상자 수 확대 추진('18~)
-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 운영으로 어업인후계자의 창업 지원(계속)

○ 수산계고교생 취·창업 특성화 교육 및 실습장비 지원

- 수산계고교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산-관-학 연계 강화** 및 **우수 취업처 발굴** 등으로 **취업여건 조성**

* 旣체결한 '해수부-수산계 고교 협의회-46개 협·단체 간 MOU('15.7)'를 보완하여 우수 사례· 요구사항 공유 등을 위한 정기적 협의회 구축 추진('19~)

- 종합승선실습 수요 만족을 위해 **다목적 어선실습선 건조**('18)

* 총 332.7억원('15～'18년) / 총톤수 1,520톤 / 승선인원 총 83명 / 복합어로실습선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맞춤형 해양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18년도 신규사업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방향 좌우

□ **수요자 맞춤형 해운인력 경쟁력 강화**

○ 한진사태 등 국적선박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해사고 졸업생의 외항선사 취업 애로 우려**되므로, **선진 교육장비 구축 등을 통한 내실 있는 해양 마이스터 육성** 필요

□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를 통한 선원직 매력화**

○ **선원 근로여건 개선**은 대체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 간 갈등 발생 우려**가 있으나,

○ **육상근로자 및 해외 사례, 국제협약 등을 감안**하여 선원, 선사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간 간 **충분한 사전협의 진행**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전략('17.3) 등**

전략목표 Ⅵ	대형사고 제로화로 안전한 바다를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주요목표 ('16→'21)	**· 주요 사고·사망자수 30% 감소** **·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완료** **·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를 위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세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 범정부 차원의 해사안전 협업강화로 안전관리 현장실효성 확보

○ 다중이용선박 및 어선 등 취약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사고 예방

◇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양재해를 막는다.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해수유동 예측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 안전한 연안환경조성, 지진대응체계 선진화 및 對테러 대응체계 확보

◇ 해양안전문화를 확산 및 국제 해사안전문야 영향력을 확대한다.

○ 범국민 해양안전캠페인 및 종사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 확대 등

○ 국제현안에 대한 의제 개발,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적 외연 확대

< 전략목표 Ⅵ : 성과목표 체계 >

성 과 목 표	실적	목 표 치				
	'16	'17	'18	'19	'20	'21
Ⅵ-1.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차세대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한다 (해양사고 인명 피해(사망·실종) 저감(명))	129 (최근 5년평균)	121	116	113	109	106
Ⅵ-2.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양재해를 막는다 (사전예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율*(%))	-	100	100	100	100	100
Ⅵ-3.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 (종사자 해양안전의식 강화(명))	10,662 (최근 5년평균)	45,300	47,500	49,800	52,000	54,600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추진, 해양예·경보서비스개선율, 지진경보체계구축 추진율

성과목표 Ⅵ-1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를 위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세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1) 주요 내용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철저한 이행으로 해양사고 예방**

○ 정부, 공공기관, 선사의 **3중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객·화물의 **철저한 점검·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회복**으로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재도약**

○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개선** 및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신조를 위해 정부 주도의 **선박 건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수송 여건 조성**

□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으로 사고발생 개연요소 사전 제거**

○ 선종별 안전관리 기관과의 **협업체계** 및 각종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검증·개선**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현장실효성** 확보

□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취약 선박 등 선종별 안전관리 대책 강화**

○ 선박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선박운항 환경 조성**

□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장비 확대·보급**, 어업정보통신국 신설 등 **어선 안전인프라 확충**

○ 소형 및 영세하다는 이유로 **완화 적용**했던 어선의 **복원성 승인**, **만재흘수선 표시**, **불법 증·개축 방지** 등 **어선 안전규정**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예방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및 **이차보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대형카페리선 등 **내항여객선 신조 추진**('17~'22, 40척)

* 협약금융기관 확대, 선박담보비율 및 대출기간 조정 등을 통해 선사의 대출 편의 도모

○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및 **국고여객선** 적시 **준공, 보조항로 선박 대체** 등을 통한 **쾌적한 해상교통 여건 개선**('17~)

□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및 해양교통 환경 개선

○ **통합적 선박안전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주요 안전정책 협업**을 위해 주기적인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운영

- 안전관리 주체별 안전대책 공유, 체계 개선 및 협업방안 논의 등

○ **안전관리 투자여건 위축에 따른 탄력적 선사지원 방안 추진**

- **안전관리 우수선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경감,** 선박검사·ISM **심사수수료** 면제 등 **제도적·경제적 지원** 강화

- 소형선사 **안전관리체계**(ISM) **운영 정상화**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해사안전 컨설팅 서비스'** 내실화

○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핵심기술**('16~'19)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송신국**('19) 구축, 시험운영 및 상용화('20~)

* '16년(기본설계) → '17년(상세설계) → '18년(테스트베드) → '19년(통합구축) → '20년, '21년(시험운영 및 보완) → '22년 이후(정상운영 및 확대구축)

□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취약 선박 등 선종별 안전관리 대책 강화

○ 13인 이상 불특정 다수가 승선하는 **내항여객선, 유도선** 등의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지속** 및 **사고예방시스템 개발 R&D 추진**

* 승무기준 강화(승객안전관리자 승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착·작동 의무화 및 자동 조난신호 발신장비 개발 등 중기과제 추진

* "해양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기반연구('14~'18)" 추진('17년 예산/15억원)

○ 부실기국 등록선, **고위험선박** 등 기준미달 **외국적선** 항만국 통제 및 **국적선**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 사전·사후 점검 강화**

대 상	주 요 대 책
대형인명사고	대형인명사고 예방 3대 중점항목(복원성, 화재, 무리한 운항)과 노후선 안전강화에 점검역량 집중
노후선 운항	한-중간 노후 국제여객선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 및 결함 시정을 통해 신조선 대체유도
쾌속선 안전	수중물체와 충돌우려가 있는 쾌속여객선의 위험구간 감속 및 안전벨트 착용 이행실태 수시확인

□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 **자동소화장치, 팽창식 구명조끼,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등 어선용 안전장비 지속 보급('17년 11.4억원)

* ('17년 계획) 구명조끼(4.9천개), 자동소화장치(9백대), VHF-DSC(14백대)

○ **완도·보령지역 어업정보통신국 신설**(16국→18국), 노후화된 **어선 안전조업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3억원, '17.5. 용역계약)

○ **안전장비**가 **상시작동**을 위해 **무선통신설비,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미 수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과태료 등) **강화**

* 무선설비 미작동(0→300만원), 위치발신장치 미작동(100→300백만원), 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미수리(100→300만원) / (어선법 개정안 국회제출, '16.12.7)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조선해운 업황 악화에 따른 금융권에서 위험업종 분류 등 지급보증을 기피하여 **RG(선수금보증서) 발급 제한**으로 **사업 지연 추세**

○ **선사**는 선수금 미회수 우려에 따라 RG 미발급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기피**하고, 선사의 금융기관 대출도 어려워 **건조자금 확보 곤란**

- **현대화 펀드** 및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선박의 경우에도 RG가 발급되지 않고 있어 **현대화 사업**에 **심각한 차질 초래**

○ RG 지원 강화 등 **해수부·산자부가 협업**하여 금융위 등 금융당국에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 지속 추진 필요**('17.6~계속)

□ **해양이용의 수요 다양화, 복잡화로 인한 해상교통환경 악화**

○ 해양에서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우려지속**,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해양안전관리 혁신요구** 증대

○ 국민의 **해양이용 다변화** 및 **증가추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을 낚시어선·레저선박 등 **소형선종**과 **일반국민**까지 **확대·강화** 필요

○ 국제적인 해운경기 회복 불투명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선사**의 **안전품질경영 환경 악화**

○ 어선은 상선에 비해 사고에 취약하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안전 구조·설비**를 갖추지 못한 채 조업하는 등 **인프라 취약**

○ 우리나라는 **독자항법시스템**이 없어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GPS 전파교란시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

- GPS 전파교란 시에도 항법, 통신 등 **산업 전반**에 **중단없는 위치 및 시각**(時刻)정보 제공을 위한 **GPS 백업시스템** 필요

성과목표 Ⅵ-2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양재해를 막는다.

(1)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최대 100km 해역**까지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구축***

* 한국형 e-Nav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LTE-M 운영시스템(Core망) 및 해안 기지국 설치를 통해 e-Nav 서비스 구현 지원

□ **해적피해예방법*** **시행**으로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적선원과 선박**의 **안전 강화**

○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국제항해선박에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 등 추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공포('16.12.27)·시행('17.12.28)

□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 신뢰도 제고**

○ **너울성 파도** 등 **연안이상현상**의 발생원인 규명과 **재해 저감**을 위한 **예측기술 개발** 및 **예·경보 체계** 구축

○ 해양관측·예보기반 강화 및 **빅데이터** 활용기술을 접목한 **해양예보 정확도** 향상 추진

□ **안전한 연안 공간 조성으로 공유수면 관리 선진화**

○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10-'19년, 370개소, 약 2조원)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체계적 추진('16년까지 5,978억원, 現추진율 30.1%)

○ 주요 연안 250개소 **침식모니터링, 항공기 탑재용 수심측량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한 **3차원정보** 확보 등 과학적 정보 수집

□ **지진정보 발송 및 지진계측시스템 구축**

○ 최근 경주지진 등 빈번한 **지진발생**에 **대비**한 **대응시스템 구축** 및 **지진피해예측**을 위한 **비상대처방안** 수립

* 총 8개 항만 18개소 지진계 설치·운영(2010년 : 인천항 2개소, 2011년 : 목포항, 부산항, 울산항, 동해항 등 7개소, 2013년 : 포항항, 부산신항, 광양항, 군산항 등 9개소)

□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선진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의 **증가, 선박 대형화 추세** 등에 따라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제·개정 요구**가 증가

○ 항만시설 기술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기술기준**의 **효과적·체계적**인 **운영**을 추진 필요

□ **선진형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내실화**

○ 항만 내 **위험물 및 도선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안전점검 추진**으로 **안전한 항만운영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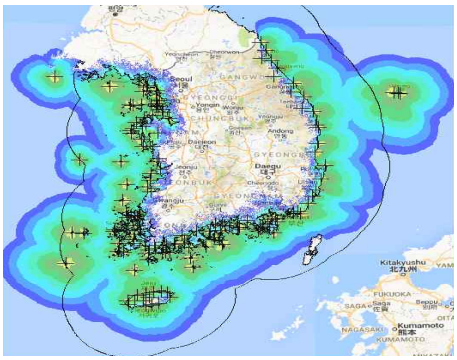
○ 텐진항 물류창고 폭발사고('15.8) 및 우이산호 유류 유출사고('14.1)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aritime) 운영을 위한 **전국망 구축**

○ 사업자 선정, 지역별 해안 기지국 설치 등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 **체계 단계적 구축**(~'20년, 313억원 투입)

* 통신장비(라우터 등) 보급 방안 검토 병행



○ LTE-M. 통신망 운영체계 마련('22년)

□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의 체계적 이행**

○ 관계기관 협의 및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심의를 통해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18년)

○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 심사제도** 실시하고,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 및 무기구입 등 **관리여부 지속감독**

□ **해양 예·경보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기반의 **해수유동 예측 시스템 서비스** 개선('18~'22) 및 너울성 파도 등 **연안이상현상 예측·대응 기술** 개발('14~'18)

○ 연안이상 현상 **예·경보시스템 시범 구축**('18, 동해안 1개소) 및 한반도 주변해역 광역감시를 위한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발사('19)

□ **연안침식· 침수 대응 및 공유수면 공공성 제고**

○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3회) 및 **현장점검**(2회) 실시

○ 연안침식 현상의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전국 **주요연안**(250개소)의 **침식상황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소통하는 **침식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공유수면의 **공공성**과 **이용수요 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바닷가 **실태조사** 및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항만 내 **위험물 및 도선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안전점검 강화**

○ 5만톤급 이상 위험물운송선박 계류시설에 대한 **하역안전장비*** **의무설치**를 위한 **선박입출항법 개정**('17.12월)

* 선박 접안속도계, 외부충격 시 자동차단밸브 및 경보시스템 등

○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만 내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등 **안전점검 정례화**('17~계속)

○ 도선안전체계 전면개편, **면허 갱신제 등**을 **도입**하고, **민관복합 관광미항**(강정항) 크루즈 입항에 따른 **강제도선구 지정**('17.7월)

* 면허갱신제, 보수교육, 항만별 도선매뉴얼, 도선계획 도입 등(도선법개정, '17.上)

□ **지진정보 발송 및 지진계측 시스템 구축**

○ 지진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지진정보**(문자, 이메일) **자동 발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진 발생시간 및 위치, 지진규모, 지진계측시스템 관측값 등
** 종합 상황실내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설치 및 24시간 지진감시 구현

□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선진 관리체계 구축**

○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선진 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립

* 항만법 개정, 기술기준 코드화, 관리지침 제정 등

○ 항만시설 기술기준 사용자 간담회 개최, 항만시설 기술기준 코드* 고시, 항만시설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정

* 항만시설 기술기준 코드화 집필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항만시설 기술기준 코드(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항만보안 시스템 구축** 및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한 **항만보안 강화**

○ **제2차 국가항만보안계획**('18~'27) **수립** 및 보안사고 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항만보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17.下)

○ 취약 **보안시설 개선·첨단 보안 장비 도입**(차량형 X-Ray 검색기 등, '17.下) 및 보안시설장비 **세부기준* 강화**('17.6월)

* CCTV, 보안울타리 재질,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항만보안법 시행규칙 개정)

○ **선박 출입허가(금지)제 강화·확대**(보안구역 외 불개항장 포함) 및 **보안경비 위탁업체 지정제*** 등 도입('17.6월)

* 경비업체 대형화·체계화, 보안인력 전문화 및 책임 강화(보안사고 발생시 지정 취소)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주파수 간섭 문제 해소**, 아국에게 유리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거버넌스 구축** 등 **필요**

* 국제해사기구(IMO)의 e-Nav 도입('20~) 이후 10년간 약 1,200조원의 신규시장 형성에 대비 국제표준 선점·주도를 위한 유럽·미국 등 각국의 경쟁 치열

□ **해적피해예방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검증 지속 추진**

○ 새로운 국제기준 마련 등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상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간 협업 필요**

○ 너울성 파도 등 **연안 이상현상 예·경보 시스템 시범구축**을 통해 부처(기상청, 행정안전부)간 **협업방안 도출** 및 **협력** 추진

□ 해양자원·에너지 개발 등 **연안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연안재해 피해**도 **증가**

* 국가 산단 82%가 연안에 밀집, 공유수면 점·사용은 '10년 이후 매년 약 1천 건씩 증가

** 자연재해 피해액 중 연안지역 비율(%): ('11) 45% → ('12) 87% → ('13) 9% → ('14) 74% → ('15) 98%

○ 해양 신산업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연안이용 및 보전수요의 합리적 조정, 연안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중노임단가 반영 필요**

○ **국회 및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필요

□ 항만 내 위험물은 물질별로 **적용법령과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관계부처 간**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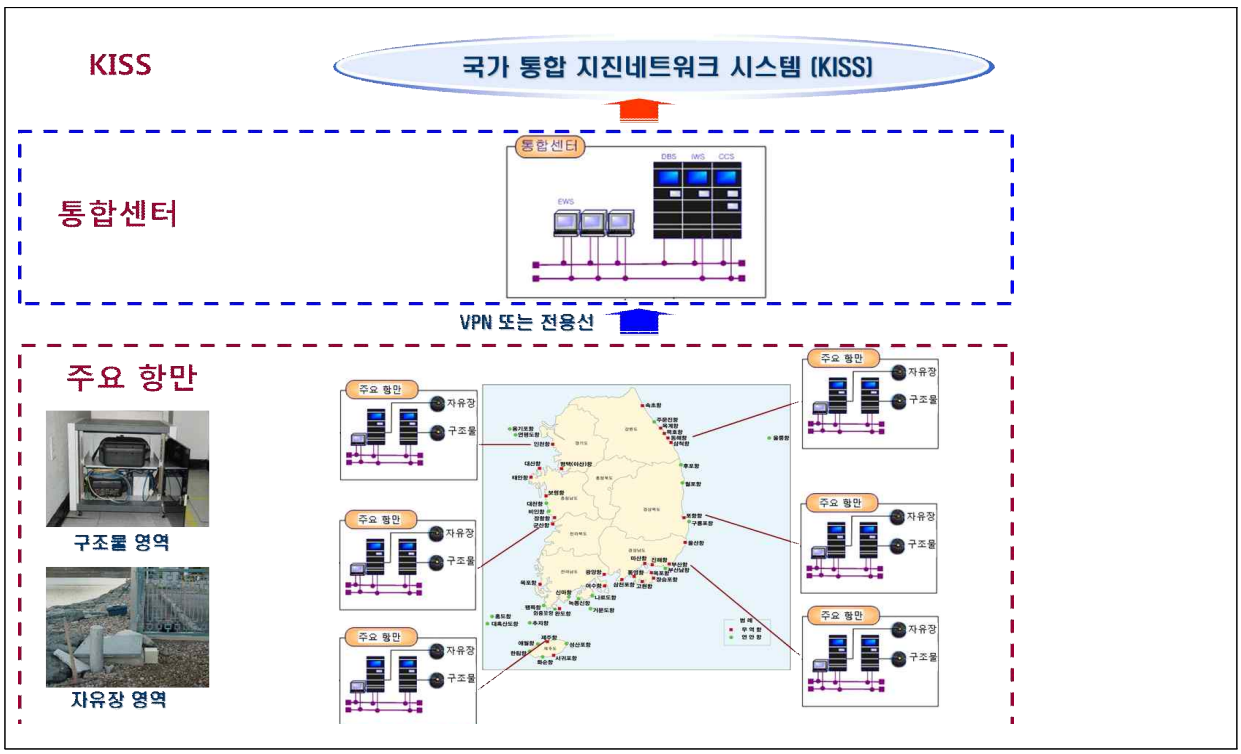
○ 선박 접안 후 하역까지는 우리부가 관리하고, 하역 후에는 물질별*로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이 담당하는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 (해양수산부) 선박입출항법,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산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등

□ 국민안전처 **국가통합지진네트워크 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향후 **항만 내 지진계측시스템**과 **연계·통합**관리 필요

(4)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 **항만 지진계측시스템 체계도**



성과목표 Ⅵ-3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제 해사안전분야 영향력을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해양안전캠페인, 해양안전 콘텐츠 개발 등 체계적인 해양안전문화 확산사업 추진**

○ 여객터미널 등 **다중 이용장소**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 캠페인 개최,** 해양안전 **콘텐츠 발굴·제작·배포**를 통한 **문화 확산**

□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와 **역량강화**를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 해운업계 **최고경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확대**와 **해양사고 상황별 현장 학습교재 제작·보급**

□ 어선 **안전점검** 및 **합동캠페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강화**를 통해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

○ 매월 1일을 **'어선안전의 날'**로 지정, 안전문화가 **어업인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홍보 추진

○ **톤급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도서벽지 등에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 **수요자 중심교육** 실시

□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국격 제고**, 주요 해운·항만국과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한 해사안전 분야 **국제 영향력 확대**

○ 해사안전, 해양환경 **新규제 선점**을 통한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및 양·다자 **협력강화**를 통한 **국적선 운항편의 증진** 등

(2) 세부 추진계획

□ **국민 참여형 안전캠페인 '해양안전의 날' 활동 및 해양안전 홍보 동영상 및 공익포스터 등 제작 홍보**

○ **계절별**로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제에 맞는 국민 참여형** 안전캠페인 **'해양안전의 날'**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매월 1일)

* 봄철 : 무중항해, 여름철 : 태풍피해 예방, 가을철 : 졸음운항, 겨울철 : 화재예방 등

○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동영상**과 안전운항 계도용 **포스터** 제작하여 **관계 기관·업단체 및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통하여 지속 홍보**

* 동영상 2편(구명조끼 착용생활화, 소형선박 기초안전수칙), 포스터 3개 (졸음운항, 음주운항, 구명조끼착용 계도용)

□ **해양수산 경영층 및 육·해상 종사자 해양사고 예방교육과 맞춤형 현장 학습교재 보급을 통한 업계의 안전의식 제고**

○ **중소 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을 실시('17년 300명)하고, **선원** 등 종사자 **체험형 방선·집합교육** 시행('17년 4.5만명)

○ **교육대상자별 맞춤교재 개발** 후 현장학습 가능한 **배포용 교재** (핸드북) 및 해양사고 주요사례 **동영상**(집합교육 교재) **제작·배포**

□ **어선원 안전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

○ 전국 주요 항·포구(111개)에서 조업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 점검 생활화** 등 **안전캠페인** 집중 전개

* 매월 1일을 '어선안전의 날'로 지정, 안전문화가 어업인 생활 속에 정착

○ 어선사고 다발시기(11월~익년 3월)에는 사고취약 어선 위주로 관계기관(KST·수협·지자체 등) 합동 **"특별 어선 안전점검"** 실시

○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기관고장시 응급처치법** 등 안전조업교육 연중 실시

* '17년 교육 계획 : 49천명(비조합원 2천명 포함) 470회 실시 / 예산 5억원

□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제해사정책 개발** 및 IMO 新규제 **대응**을 통한 아국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A그룹 **이사국 재선임** 추진, 양·다자 **협력 강화**, 개도국 **기술협력 사업** 등을 통한 **국격제고, 우호세력 구축** 및 **IMO 공동 대응 추진**

○ **산·학·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국제해사협의회** 운영, **IMO 전략대응 연구** 강화, **IMO 대표부** 설치 및 **한국해사주간** 개최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지속적인 안전교육**에 따른 **종사자**들의 **피로감 호소**와 단기 **실적위주**의 **안전캠페인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속·반복**되는 **현장교육** 및 **안전교육**으로 인해 **선박종사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 범국민적 인식전환과 계도를 위한 안전캠페인이 **국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실적위주**로 **변질**될 **우려** 상존

□ 조업 중 **안전수칙 미 준수**(구명조끼 미 착용 등)로 인한 **단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등 **어업인 안전의식 부재**

* '16년도 어선 인명사고 총 97명 중 안전사고(추락·어망감김 등)가 64명(66%)

□ **IMO 新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대립 해소방안** 마련

○ 새로운 국제규제는 **선박소유자** 등에게는 추가**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에는 **수익창출 기회**이므로, 상호 대립된 이해관계 해소 필요